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2020. May

Vol. 41

5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재정칼럼
툏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 Talk Talk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재정 캘린더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May, 2020
VOL. 41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93

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재정 INSIGHT

04 • KPFIS 인사이드

- 글로벌 금융위기 시 주요국 재정대응과 시사점
장윤정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12 • 재정칼럼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재정의 역할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신종(Novel)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신종(Novel) 금융지원정책
신영석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 • 톺아보기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지원



재정 NOW

- 22**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28** •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 36** • 「e나라도움」 포커스
e나라도움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공모
- 44** • 키워드 재정
재난지원
- 48** • 해외재정동향
2020 OECD 중간 경제전망
Coronavirus The World Economy at Risk



재정 STORY

- 52** • 이달의 재정 이야기
·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경제정책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 58** • 재정 Talk Talk
국가재정은 어떤 구조로 운용될까요?
- 60**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유럽의 장기 불황 속 실업자가 된 폴 고갱
- 64** • 경제철학 이야기
사회주의의 선구자, 존 스튜어트 밀
- 68** • KPFIS의 서재
- 70** • 재정 캘린더
- 72**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글로벌 금융위기 시 주요국 재정대응과 시사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증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경기 침체 또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일본, 독일의 재정정책적 대응과 위기 이후 건전화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재정운영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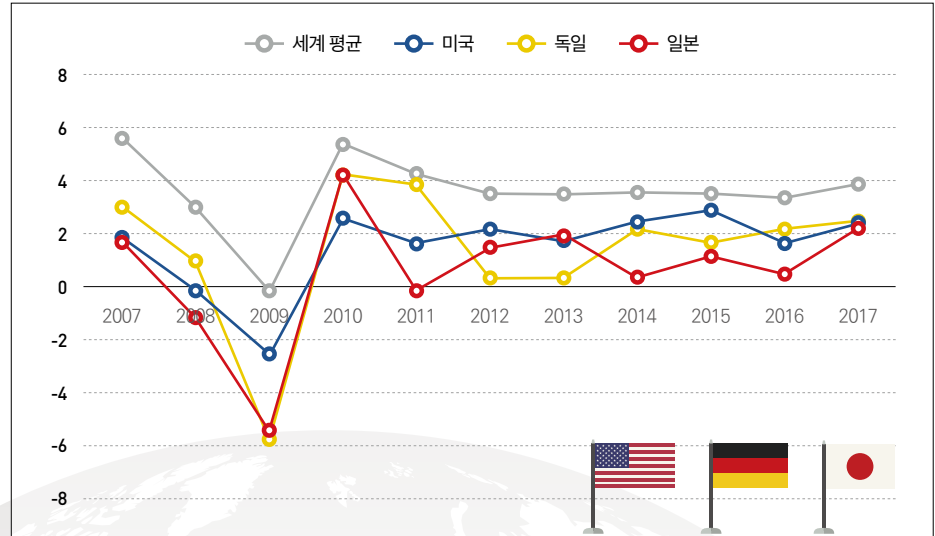
장윤정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yjchang@kpfis.or.kr)

1 ————— 글로벌 금융위기와 각국 대응 동향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린 것은 2007년 9월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전문회사 프레디맥과 패니메이가 주택가격 급락에 따른 채권 부실화로 미 연방정부와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이다. 부실화된 대출 채권이 복잡한 구조화를 거친 파생금융상품 형태로 금융시장에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공포와 투자심리 위축이 확산되어 나갔으며, 2008년 9월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선언에 이르자 당일 미 증시는 -4.3% 폭락하였다. 자산시장과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어 2009년 1/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환산 -6.4%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2008년 1월 4.9%에서 2009년 6월에는 두 배 수준인 9.5%까지 급등하였다.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컸던 만큼 위기는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2009년 미국이 -2.5%, 일본 -5.4%, 독일은 -5.7% 역성장하는 등 현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림 1. 글로벌 금융위기 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IMF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동반 위기에 각국 정부는 유동성 공급 외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으로 대응하였다. 먼저 미국은 유동성 공급과 주택자금 상환 등에 대한 소규모 재정대책 중심으로 대응하다가,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였다. 「긴급경제안정화법」에 따라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이 도입되어, 은행 우선주 매입 등 금융기관에 절반 이상이 배정되었다. 다음으로 오바마정부 출범 뒤인 2009년 2월, 10년간 7,872억 달러 규모의 경제회생과 재투자법이 발표되었다. 5,754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은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지방정부 지원 등에 쓰였고 2,118억달러 규모의 감세는 주로 저소득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써 근로수혜(Making Work Pay) 세액공제 신설, 근로장려공제 수혜금액 확대, 개인소득세 최저한세 면제금액 증액 등 개인에 대한 감세가 77%를 차지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입부터 대미 수출 붐에 힘입어 장기 불황을 타개하고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의 수요 위축이 경제에 큰 타격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2008~2009년 5차례 누계 156.4조엔(2009년 일본 GDP 대비 32%)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금융지원이 약 100조엔이며, 사회보장성 지출 및 지방정부 지원 등이 약 50조엔 규모이다. 이들의 순재정지출은 39.8조엔(2009년 일본 GDP 대비 8.1%) 규모에 해당한다.

표 1. 2008~2009년 일본의 경제대책

경기부양조치	발표시기	규모	순재정지출
안심실현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	2008.8.	11.5조엔	2조엔
생활대책 - 국민생활 안정 및 지방정부 지원	2008.10.	26.9조엔	5.2조엔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 고용지원 및 경제긴급대응	2008.12.	37조엔 ¹⁾	10조엔
경제위기대책 - 고용안정 및 성장추진전략	2009.4.	56.8조엔	15.4조엔
긴급경제대책	2009.12.	24.2조엔	7.2조엔

자료: 한은(2015), 서세옥, '일본 재정개혁 사례의 시사점', 예산정책연구 (2012) 및 임언선(2009)

주 1) 직전 생활대책 6조엔 중복 제외

독일은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신용 경색 및 생산, 교역 감소로 2008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3차례 누계 5,810억 유로(2009년 독일 GDP 대비 21%) 규모의 부양책이 발표되었다. 5,0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제외하면 1, 2차 대책의 재정효과는 약 600억 유로(GDP 대비 약 2%) 규모이다. 재정지출의 주요 내용은 경기부양을 위해 친환경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수요를 촉진하는 한편, 조업단축급여·자녀양육보너스 등 사회급여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 —————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화 계획과 이행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의 채무가 2007년 평균 73.4%에서 2010년 101.4%로 약 30%p 증가하고, 앞서 언급한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가시화 되자,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OECD가 2009년 회원국의 계획을 집계한 결과¹ 평균적으로 재정건전화 목표의 2/3를 재정지출 축소, 약 1/3을 재정수입 증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운영비²보다는 사업비³ 지출 축소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마련하였고, 사업비 내에서는 복지, 의료, 연금, 인프라 순서로 감축 대상을 정하였다. 한편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증세한 세목은 주로 소비세, 소득세, 재산세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국가부채가 2007년 64.4%에서 2010년 95.2%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2010년 페이그 준칙(Pay-go Rule) 제정, 2010~2012년간 공무원 수당 동결, 각 부처 예산 5% 감축 등 재정건전화 정책의 기본방향만 마련하였다. 그러다 구체적 이행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들어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2011.4.)하기에 이르자 민주·공화 양 당간 합의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2012~2021년간 재정효율화를 통해 총 4.3조 달러(GDP 대비 2.2%, 연평균)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 중 73%를 세출 부문을 통해 달성하는 방안이 발표(2011.8.)되었다. 지출 축소는 세부내용이 합의된 10년간 총 9,170억달러 규모 삭감⁴ 및 합동양원위원회 결렬에 따른 10년간 연간 1,100억달러의 자동삭감⁵으로 구분된다. 세입 측면에서 2011년 유산세를 제도입하며 2013년 개인최고 소득세를 인상, 사회보장급여세를 원상 복귀 등 고소득·자산가 중심 증세를 시행하였다. 2013년 이후 미국의 국가부채는 급증세를 멈추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재정의 성장파급효과가 여타 국가에 비해 컸던 것으로 분석되는 등⁶, 위기 시 재정 대응책이 효과적이었던 평가가 있다.

1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2012), 「OECD회원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분석, 평가」

2 Operational measures로, 공공부문 임금삭감(Wage Cuts), 고용축소(Staff Reductions), 기타 경상운영비용 삭감 등에 해당한다.

3 Programme measures로, 복지(Welfare), 의료(Health), 연금(Pensions), 인프라(Infrastructure), 지방정부 이전지출(Lower levels of government), 교육(Education), 공공기관 지원, 개도국 지원, 에너지/환경/농업 보조금 등에 해당한다.

4 국방비 3,500달러, 재량지출 3,910억달러, 이자지급액 1,560억달러, 의무지출 200억달러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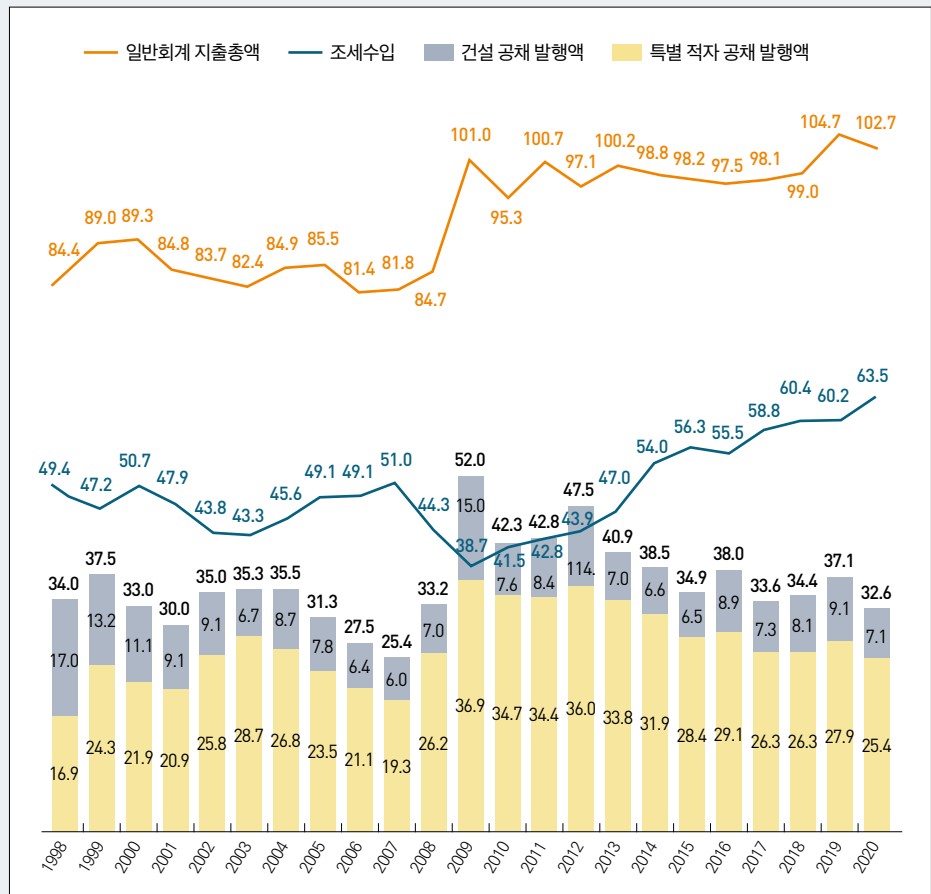
5 2014~2015년의 예산삭감을 취소하고 적용기간을 2021년에서 2023년까지로 연장하기로 추후 합의하였으며, 국방비 550억달러, 비국방비 550억달러(비국방비 중 의무지출 180억)등으로 구성된다.

6 한국은행(2015),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재정효율화 사례 및 시사점", 한은 국제경제 리뷰, 2015-16호

일본의 경우, 금융위기 시 재정수지 적자가 악화되어 국가채무가 2007년 154.3%에서 2010년 186.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0년 6월, 2015년까지 기초 재정수지를 2010년의 절반인 -3.2%로 감축하고, 2020년에는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체적 이행방안은 2011년의 국채발행액이 2010년 수준인 44조엔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신규지출 사업 도입 시 반드시 지출증가분을 상쇄하는 세입증가조치를 수반하는 것 등이다. 2011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지방 정부 이양금 감액 안 등을 제시하였고, 2010년 이후 일반회계 총지출은 연평균 0.8%의 낮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매년 100조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2. 일본의 일반회계 재정 현황

(단위: 조엔)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2020), 「2020년 본예산 설명 자료」

세입부문에서는 2012년 11월 사회보장수요 충당을 위한 소비세 5%p 증세 방안을 발표하고, 2015년 소득세 4천만엔 초과 구간 45% 세율 신설 등 재정수입 증대 조치를 취하였다. 소비세는 5%p 증세분 중 1%p분은 보육, 요양서비스 등에, 4%p분은 기초연금기금 재원 등으로 사용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로 계획하였다⁷.

아베 정부 하 재정건전화 정책의 지속 결과, 국가부채 비율은 2014년 이후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폭도 점차 감소하여 2015년 기초재정수지 -3.0%로 당초 목표(-3.2%)를 달성하였다.

독일은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2010년 재정적자가 4.3%까지 확대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66.4%에서 2010년 88.2%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개헌을 통해 EU 재정준칙보다 강화된 내용의 재정준칙을 연방 및 주 정부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 6월에는 2011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3%로 감축, 2014년에는 균형재정수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긴축 재정안(Austerity Package)을 발표하였다. 2011~2014년 중 총 817억유로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실현방안으로써 세입 증대(35.1%)보다는 지출 축소



(65.0%)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지출 축소를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절감하고 정부 부처 전반에 대한 사업예산을 감축하는 한편, 주택 및 보육수당을 합리화하여 사회보장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세입 확대 조치로는, 향후 위기 발생 시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는 취지의 금융기관 분담금(Bank Levy)을 도입(2010.10)하여 은행의 규모, 체계적 위험, 금융시장 통합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기로 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개헌을 통해 연방 및 주의 예산상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정상적 경제 상황 하에서는 GDP의 0.35%까지만 적자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개정 내용에 따라 연방정부는 2016년, 주정부는 2020년부터 재정수지 균형 유지를 목표로 2011년부터 경과규정 하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적자 감축에 돌입하였다. 한편 독립재정 기관으로서 재정안정위원회(Stability Council, 2009.6.)를 신설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조기경보시스템⁸을 도입하여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를 반영

⁷ 2014년 첫 3%p를 인상하였다. 당초에는 추가 2%p 인상을 2015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연기되다가, 2019년 11월에 최종 인상하여 10%가 되었다.

⁸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구조적 재정수지, 차입 대비 구조적 재정지출 비율, 이자지출 대비 조세수입 비율, 부채 규모 등 평가지표에 대해 사전에 임계값을 설정하여 이를 기초로 재정상황을 평가, 임계 값 초과 시 해당 재무당국에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한 연례 안정보고서를 발표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독일은 빠르고 성공적인 경제회복에 따라, 긴축재정안 계획에서 목표하였던 대로 2014년에는 수지 흑자 전환(0.56%)에 성공하였다.

표 2. 독일의 재정건전화 계획(2009~2015년)

(단위: 억유로, %)

구분	내용	누적 규모	GDP 대비
지출		55.1	1.92
1. 운영비		3.2	0.11
- 연방 행정부 인건비 삭감	2014년까지 1만명 일자리 감축	3.2	0.11
2. 사업비		51.9	1.81
- 사회보험 및 실업급여	부양, 주택수당 조정 고용연계형 프로그램 증대	32.3	1.13
- 국방	구조적 개혁, 4만명 감축 포함	4.0	0.14
- 기타	연방 예산 전반 삭감 (교육과 연구개발은 제외)	15.6	0.54
세입		24.7	0.86
- 환경세	에너지세 특례조치 폐지, 항공연료세 도입	5.5	0.19
- 핵연료세 도입		9.2	0.32
- 금융부담금 도입		6.0	0.21
- 기타	담배세 인상	4.0	0.14

자료: OECD(2011), 「Restoring Public Finances 2011」

주: GDP는 OECD의 2014년 전망치 기준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금번 코로나19 대유행은 각국의 실물부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옴으로써, 미국의 금융부문 위기가 시차를 두고 세계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되는 양상을 띄었던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도 2차 추경예산안까지 150조원, GDP 대비 7.8% 규모의 직접지원책을 내놓았으며, 이로 인해 관리재정수지는 금년 GDP 대비 -4.3%, 국가채무는 GDP 대비 41.2%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미국, 일본, 독일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위기 시에 사회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포함한 과감하고 확실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다. 둘째로 독일의 경우 자동차 산업, 미국의 금융 산업처럼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보호책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기 종료 후 적절한 시기에 이행가능성이 담보되는 재정건전화 조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위기가 진행 중일 때 건전화를 위한 개헌과 제도적 준비를 했던 독일의 사례는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이 정치문화에 의해 뒷받침 되어 온 국가들이 위기를 수월하게 극복하고 재정건전성 회복도 이뤄낸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만 일부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우 때이른 긴축정책으로 현재까지도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경기부양이 충분히 이뤄지기도 전에 국가부도 위험이 급증하여 국제사회를 의식한 긴축정책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로 전환하는 시기는 고용지표와 실물 경제 회복을 고려해 너무 늦거나 빠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 직전 우리나라는 경기와 고용 지표의 미약한 회복세와 재정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일자리와 소득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다행히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발 경제위기에 대응할 재정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로 재정지출이 현재도 자연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감지되는 시점에 늦지 않게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명확한 시계 및 목표 설정과 수단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서세옥(2012), 「일본 재정개혁 사례의 시사점」, 예산정책연구 제1권 제2호
- 성병목·김예진(2009),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 운용과 향후과제」, 한은조사연구 2009-9, 한국은행.
- 신후식·유승선·연훈수(2009),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경제현안분석 제39호.
- 이규영(200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독일의 경기활성화 정책」,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이영숙(20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세계개편 동향 연구」, 경제현안분석 제88호, 국회예산정책처.
-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2012), 「OECD회원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분석, 평가」
- 한국은행(2015),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재정효율화 사례 및 시사점」, 국제경제 리뷰, 2015-16호.
- OECD(2011), 「Restoring Public Finances 2011」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재정의 역할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icho@kgu.ac.kr)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범위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등에 관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수혜 여부 등으로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보면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와 우리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재정정책의 과제들이 가감 없이 제안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한 외국자료 검색, OECD 및 IMF 자료 검색을 통하여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참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외국의 경우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는 2020년 4월 25일 현재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재정역할의 시사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첫째, 코로나19는 이전의 경제위기와는 급이 다른 경제적 피해를 가져온다고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다¹.

물리학자는 균형과는 천지 차이의 거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제 자체가 변화하는 국면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OECD 자료에서는 현 경기침체를 과거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와 유사하게 비교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보다 훨씬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정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OECD(2020a: 14)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재정 규모는 독일이 GDP 대비 27%, 스페인과 영국이 약 15%, 프랑스가 약 12%, 우리나라가 약 6%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미국도 GDP 대비 30%에 해당하는 약 6조달러의 경제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경제 지원 패키지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코로나19 위기가 완화되자마자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능력을 재정정책으로 유지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세수입의 감소를 막으려면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부양책을 실시하여 경기침체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피해의 완화가 경제 지원의 최우선 목표라는 점이다.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 지출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재정정책은 이러한 급속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이를 참고한다면, 경제 지원 패키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야,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지속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각국이 취하는 조치 중의 하나이다. 취약계층 지원에 미국은 240억달러(약 29.6조원), 영국은 70억파운드(약 10.5조원)를 배정하였다².

코로나19는 노인, 만성 또는 장기 질환자, 빈곤층, 노숙자, 비보험 가구 및 이민자 등 단기 및 장기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국가에서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한 가구에는 기본 위생 및 건강 서비스에 대

¹ <https://www.thestreet.com/investing/futures/understanding-covid-19-fiscal-and-monetary-policy-response> (2020년 4월 25일 접속)

²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F\(2020년 4월 25일 접속\)](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F(2020년 4월 25일 접속))

한 접근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의약품 및 가정용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 근로자가 배정되기도 한다.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산업은 항공, 교통, 관광, 스포츠, 문화, 예술, 공연 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국가의 경제 지원 패키지는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유동성을 유지시켜 기업의 폐쇄 또는 파산을 막아 근로자 해고를 막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이를 위해 OECD 국가는 조세 이연, 조세 환급, 신축적 조세 납부, 조세신고기간 연장, 사회보장기여금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OECD, 2020a: 16). 우리의 경우는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이연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가계에 대한 소득 지원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업 수당의 범위가 자영업 근로자에게 확대되고 있다. 개인의 경우는 근로 시간이 단축되거나 일시적으로 해고되었지만 단시간 작업 계획 또는 작업 중단 기간 동안 회사와 직원과의 계약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실직 상태이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된 사람들에게 실업 수당을 확대하여 노동 유지를 장려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가장 취약한 가정에 즉각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불이 보다 빨리 이루어지도록 송금이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정책은 산업정책, 노동정책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 정책과 함께, 지원 정책이 시작하기 이전에 지원 정책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연구에도 착수하여 추후에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코로나19는 국가의 부채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서 OECD 국가의 GDP 대비 채무는 73%에서 101%로 높아졌는데, 코로나19는 국제금융위기보다 더 큰 폭으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에 요구되는 재정정책의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마라톤 경주를 염두에 둔 정책이어야지, 단거리 경주를 염두에 둔 정책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위기에서 회복하는데 4년 정도 걸렸다고 하면 최소한 4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지, 영구적인 적자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경제 지원 패키지 중 대출과 지급보증은 단기적으로는 재정비용은 아니지만 우발부채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간을 가지고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개인의 선별은 1년 후의 법인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등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세 이연과 같은 정책이 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한편, 확장적 재정정책은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실업 수당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좀비화도 초래하고, 언제까지나 조세 이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에서는 항상 위기가 완화되는 경우에 조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편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다. 많은 국가에서 지방정부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및 지역 차원에서 경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OECD, 2020c). 지방재정에 대한 지방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긴급 자원을 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1,500억달러(약 185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노르웨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발로 인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량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재정 패키지 외에도 주정부(Länder)는 경제 지원을 위한 많은 자체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직접 지원으로 480억유로(약 63.9조원), 주정부 대출 보증으로 730억유로(약 97조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시 지방정부의 경우는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 등 공중위생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마스크 만들기 운동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는 자발적인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보모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재무행정에서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가 제외되는 총수입, 총지출 제도보다는 총액 기준 예산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의 통합재정수지는 국채 발행의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국채 발행 및 상환 규모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총액 기준 예산제도의 운영은 조세부담률의 인상 및 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일깨워 줄 것이다.



참고 문헌

- OECD(2020a), 「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Resilience」
- OECD(2020b), 「The territorial impact of COVID-19: managing the crisi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 OECD(2020c), 「Cities policy responses」
- <https://www.thestreet.com/investing/futures/understanding-covid-19-fiscal-and-monetary-policy-response>
-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

신종(Novel)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신종(Novel) 금융지원정책

신영석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yshin57@skku.edu)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로 수많은 경제활동들이 위축되거나 실종되었고 그로 인한 총 수요의 감소는 극심했다. 경기침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 코앞에 다가왔다. 생명체도 아닌 바이러스가 경기침체를 유발시켰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각국의 금융당국은 갑자기 나타난 유동성 고갈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례 없이 공격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단기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자금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를 통한 중장기 유동성 공급을 천명했다. 아



올려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현금성 복지정책도 전례 없이 공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주요 국가들이 거의 동시에 유사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집행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가히 글로벌 정책공조라고 할만하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새로운 금융정책이다. 정책금리는 이미 제로에 가까워지거나 일부는 마이너스 영역까지 침범해 있지만 지난 수년간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중앙은행의 금리가 제로 이하로 내려간 만큼 더 강력한 수요 진작 내지는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와 아울러서 실시된 것이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이다. 즉, 통화증발을 통한 증권의 매수인데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실시된 미국 Fed(Federal Reserve System)나 ECB(European Central Bank)의 양적완화에서는 주요 매수 대상이 국채와 주택저당채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이었다. 이들 증권의 만기가 대부분 10년 전후로 길어서 수익률 곡선 전체의 높이와 기울기를 관리하는 소위 수익률 곡선 통제(Yield Curve Control)로 보이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도산으로 초래된 유동성 고갈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수혈을 위해서 해당 부문에 중앙은행이 관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한편 2010년 이후 일본 중앙은행(BOJ: Bank of Japan)의 매수 대상은 국채나 주택저당채권 뿐 아니라 놀랍게도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Traded Funds)도 포함되었다. 주식시장의 하방 변동성을 제어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도모하고 주가 수준을 부양하여 자기자본 비용(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며 신주 발행의 증가를 통한 투자 활성화의 토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그리고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대신 ETF라는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매수의 형식을 통해서 의결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일본 중앙은행의 ETF 매수는 2013년에는 1조엔 규모였으나 2014년에는 3조엔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6조엔 규모로 대폭 확대되었다. 2020년에도 꾸준히 주가지수형 ETF를 통한 일본 주식의 매수를 지속하는 중이다. 현재 일본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ETF의 규모는 약 28조엔(약 2천 6백억달러)으로서 일본 ETF시장의 75% 수준이고 일본 1부 주식시장의 4.7% 수준이며 2020년 초에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의 공무원연금(年金積立金管理運用)을 넘어서서 일본 주식시장의 제1위 대주주로 올라섰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전통적 양적완화 정책을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시행한 결과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엇갈리

고 있다. Nangle and Yates(2017), Sayuri Shirai(2018), Charoenwong, Morck & Wiwattanakantang(2020) 등은 부분적으로 주가 수준의 하락 방어 등에 도움은 되었지만 원래 정책적 의도였던 기업투자의 활성화 또는 그로 인한 경제성장이 효과적으로 견인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마치 코로나19로 비상사태를 맞은 각국의 의료당국이 충분한 검증을 거칠 여유도 없이 가능성만을 보고 실험적인 치료제나 다른 질병에 사용되었던 백신을 투약해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각국의 금융당국 역시 비전통적이고 실험적인 금융정책을 동원해서라도 급전직하하는 경기를 떠받치고 되돌려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7월에 BlackRock의 글로벌 채권 부문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인 Rick Rieder는 ECB도 주식 매수를 통하여 성장을 자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서 관심을 받았었다. 일본 중앙은행의 ETF 매수정책이 그동안 효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유럽의 경제 상황이 그러한 정책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날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도였다.

지나치게 장기화된 저금리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로 지쳐있는 금융 부문에서는 더 이상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그 대신 주가의 상향 안정화를 통한 자기자본 비용의 인하를 도모하여 투자와 성장을 자극할 수 있고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유럽 공동체 내의 각국의 재정정책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었고 따라서 ECB의 주식 매수정책이 그 보완적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포함된 견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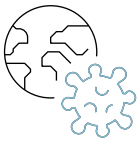
사실상 어떤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 같은 시기와 장소에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중 한 가지는 우리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즉, 일본 중앙은행의 ETF 매수가 일부 소형주들의 과대평가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일본 중앙은행의 ETF 매수에 쓰인 주가지수 ETF에는 일본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Nikkei225지수가 적용되었는데 이 주가지수의 특징은 다우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처럼 가격으로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가격이란 점이다. 이를 주식 Portfolio로 비유하면 각 종목을 1주씩 편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형주라도 주당 가격이 높으면 ETF 내에서의 상대적 편입 비중이 높아지고 중앙은행의 ETF 매수로 인해서 이러한 고가 소형주에 매수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시장가격이 고평가되는 왜곡현상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일본 중앙은행은 주가지수 ETF 매수를 가격비중식 Nikkei225지수형 ETF의 매수를 점차 줄이고 시가총액비중식 TOPIX지수형 ETF의 매수를 점차 늘여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할 점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으로서 ETF를 매수하는데

시가총액 가중형 주가지수에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 의도에 맞는 것인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가총액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주가지수는 구조적으로 시장 내에서 대형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소형주에 대한 투자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서 결국 기존 경제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즉,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를 공고히 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작고 대부분은 주가지수에 편입될 자격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중소형 기업들에게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은 주로 1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했다. 한국의 Kosdaq시장에 해당하는 Jasdaq시장에 등록된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예를 들면, Jasdaq-Top20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포함해서 같이 매수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경기회복 또는 경기활성화라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가 지수를 별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경기회복을 선도할 또는 낙수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과 기업에 집중할수록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어 중앙은행은 그러한 ETF를 매수하고 그로 인한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면서 매수의 속도 및 규모를 조절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해당 주가지수의 구성 종목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양적완화의 목표가 유동성 고갈로 인한 대량 부도를 막는 것이라면 국내나 주택담보채권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의 매수를 통해서 긴급한 유동성을 수혈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이 목표라면 주식형 ETF의 매수를 일본 중앙은행의 경우보다는 더 개선된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새로운 시도는 항상 테스트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화 아닌 원화의 증발을 통한 양적완화는 가장 필요한 최소 규모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문헌

- Nangle, T and A Yates (2017) "Quantifying the effect of the Bank of Japan's equity purchases" VoxEU.org, 12 October.
- Shirai, S (2018b), "Bank of Japan's Exchange-Traded Fund purchases as an unprecedented monetary easing policy"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Working paper no 865.
- Rieder R. (2019) "ECB can boost growth across Europe by buying stocks" Financial Times Opinion Markets Insight July 22 2019
- Charoenwong, B, R. Morck and Y. Wiwattanakantang (2020) "Bank of Japan Equity Purchases: The Final Frontier in Extreme Quantitative Easing" NBER Working Paper No. 25525



툇아보다 :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지원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 총 245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 마련 }



기업·금융 지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경감 2.2조원
- 인건비부담 완화 1.0조원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0.5조원)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0.5조원)
-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0.7조원
- 휴·폐업 점포 재기 지원 0.3조원



금융지원

- 소상공인 최저금리 특별금융 12.0조원
-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 5.5조원
- 중소·중견기업 대출 확대 21.2조원
-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10.0조원
-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10.7조원



코로나19 취약계층 소득 지원

-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9.7조원
- 사회보험료 감면·납부유예 8.4조원
- 저소득층 소비쿠폰 신설 1.0조원
- 긴급복지 지급요건 한시 완화 0.2조원
- 아동수당 대상자에 특별돌봄 쿠폰 지급 1.1조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

-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3.0→6.0조원
- 고효율가전기기 10% 구매 환급 1,500억원
- 온누리상품권 0.5조원 추가 발행 2.5→3.0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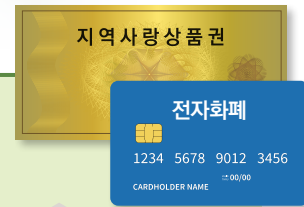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202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예산안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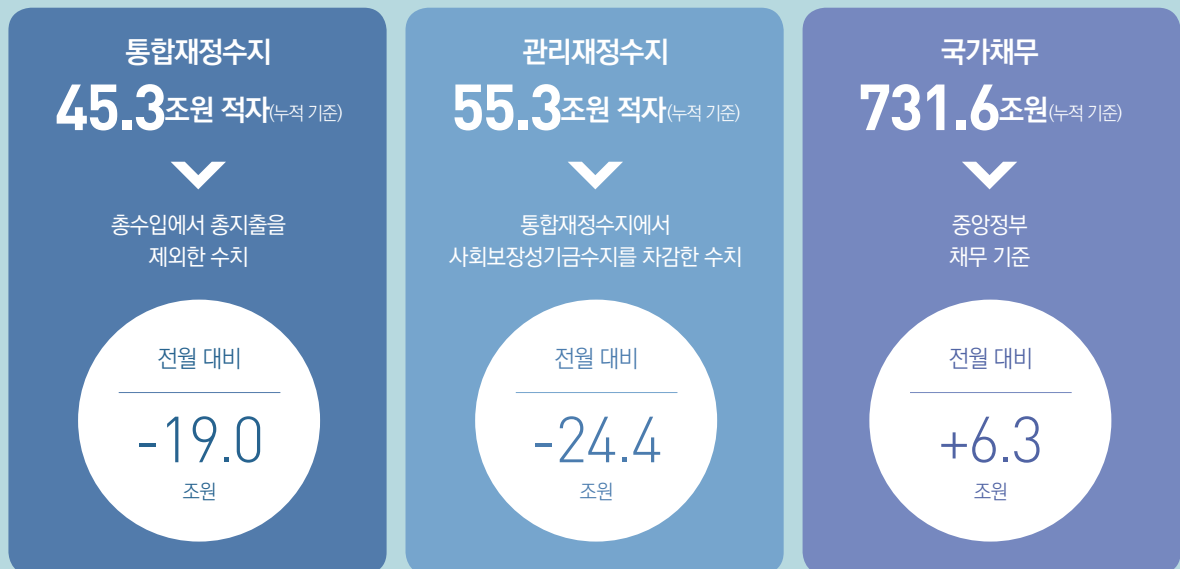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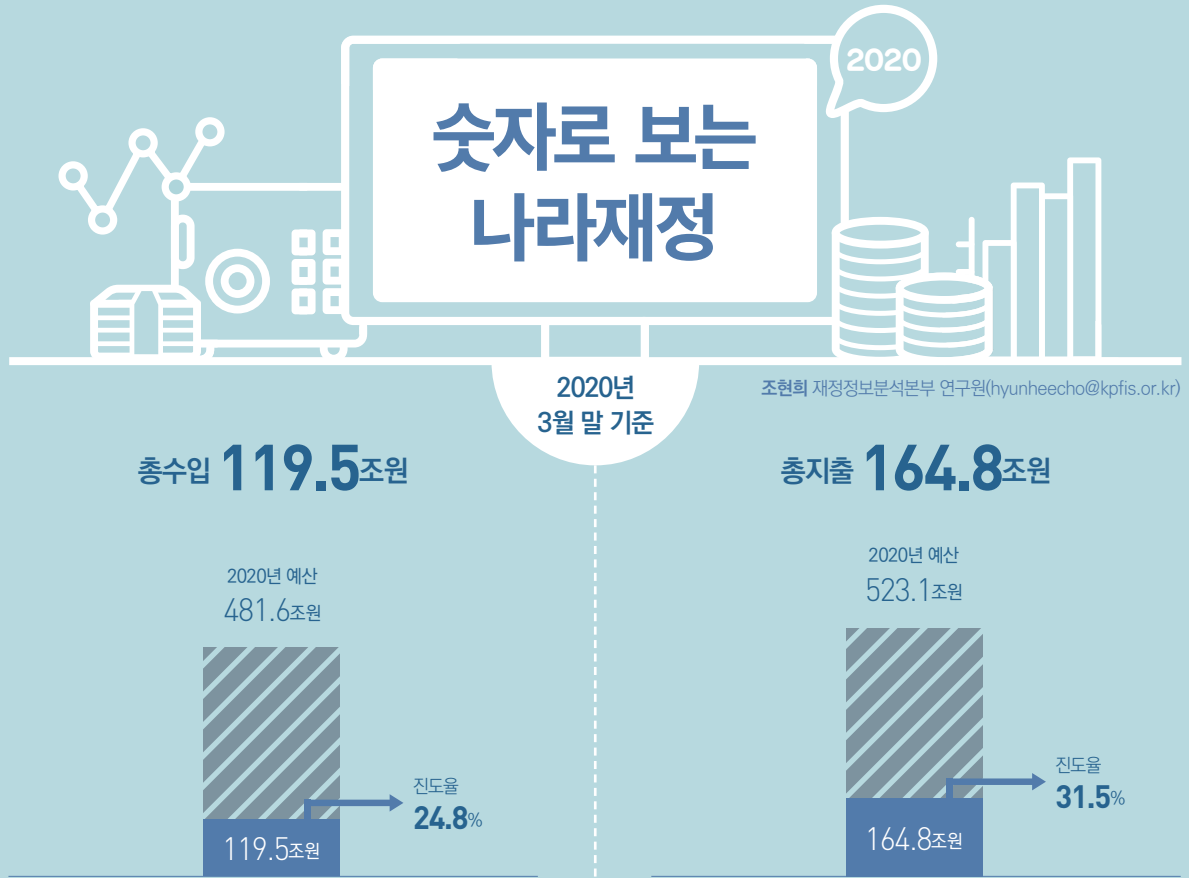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12.2조원		
특징	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②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③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One-Point 편성		
긴급재난 지원금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	
	지원 규모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지원 방식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재원 조달	국채발행 3.4조원 + 지출구조조정 등 8.8조원		
	◇ 당초 정부안 7.6조원에서 국회 심의로 1.2조원 추가 ◇ 공공부문 지출 절감 등 고통분담, 코로나19로 인한 여건변화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 등 추진 ①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감소 등 집행점검을 통한 절감 사업 ② 공공부문의 고통분담을 통한 절감 사업 ③ 금리·유가 변동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 등		
기부금 운영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① 국가의 기부금 모집, ② 미신청자의 기부 의제, ③ 기부금의 고용보험기금 수입 편입 등 근거 마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자료: 기획재정부(2020),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주 1)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 5.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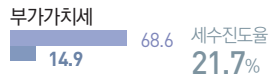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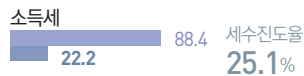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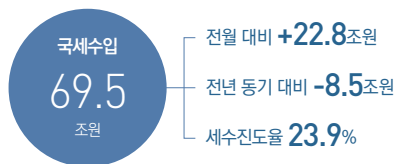
• 2020년 3월 말 기준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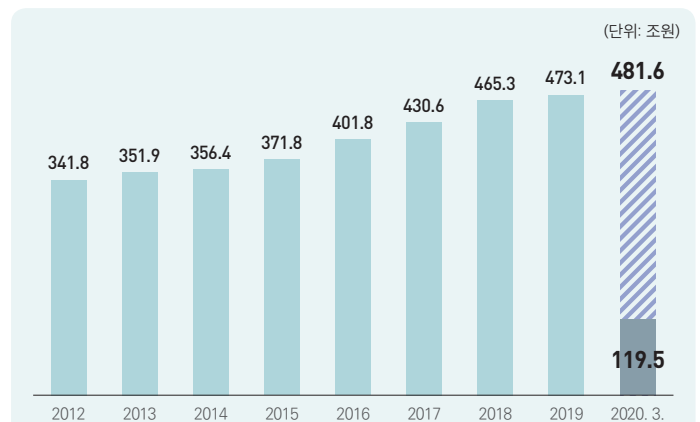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 2020년 예산
■ 2020년 3월

주 1)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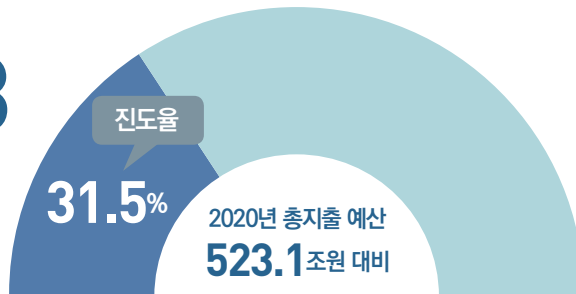
주: 2019년은 12월 말,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총 지출

• 2020년 3월 말 기준

총지출
164.8
조원



전월 대비
+60.8
조원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6.5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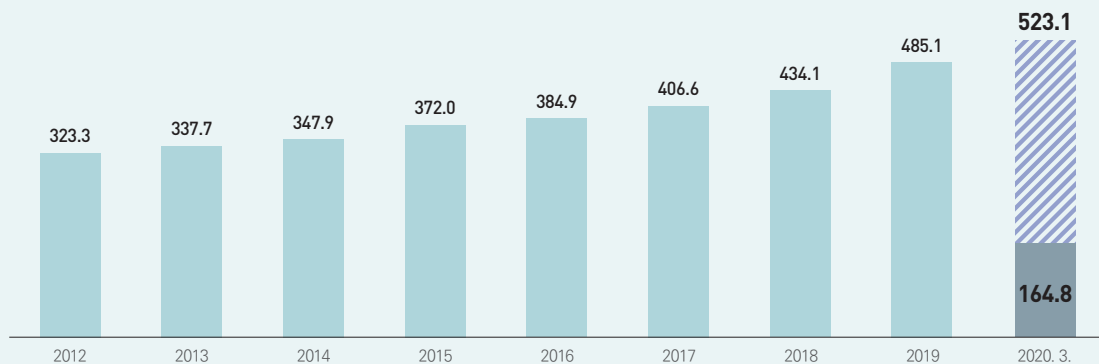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주: 2019년은 12월 말,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35.3%**



(단위: 조원, %)

	연간계획(A)	1분기 실적(B)	집행률(B/A)
합 계	307.8	108.6	35.3
중앙부처	263.8	95.2	36.1
• 예산	213.3	77.8	36.5
• 기금	50.5	17.4	34.5
공공기관	44.1	13.4	30.3

2020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단위: 조원, %)

	부처명	1분기 실적	집행률
1	문화재청	0.5	56.0
2	산업통상자원부	4.5	55.5
3	산림청	0.9	53.4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	50.2
5	보건복지부	9.3	45.2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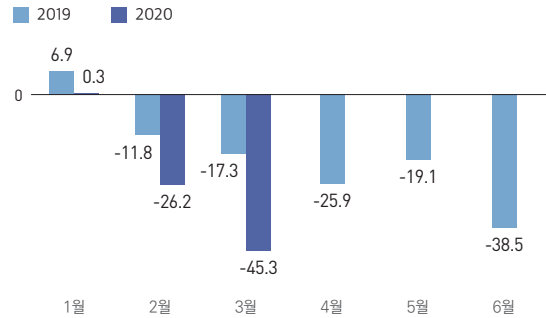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 2020년 3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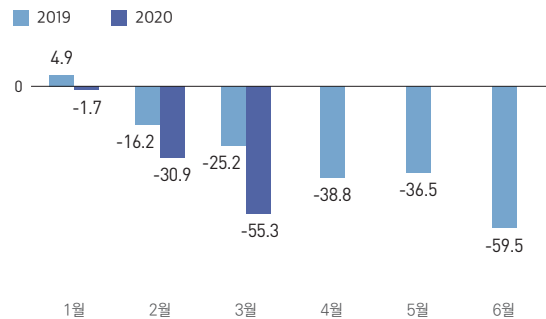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45.3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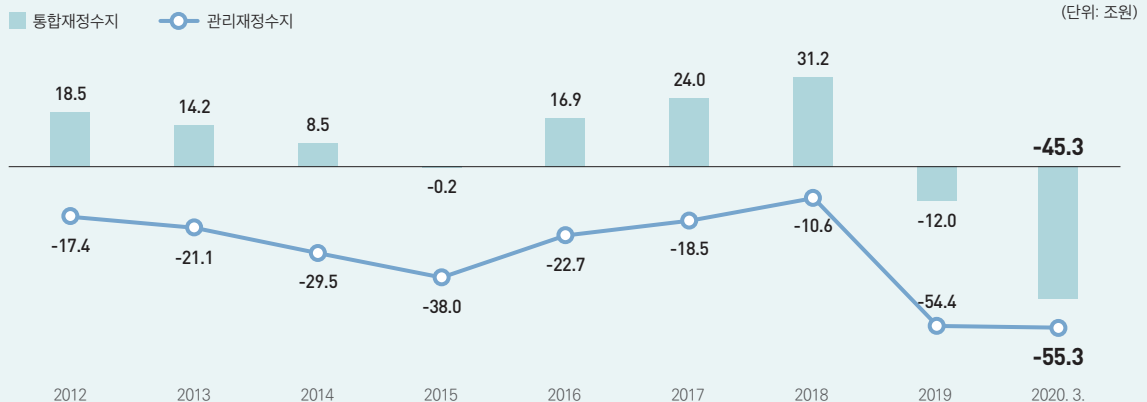
55.3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0.0조원 흑자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19년은 12월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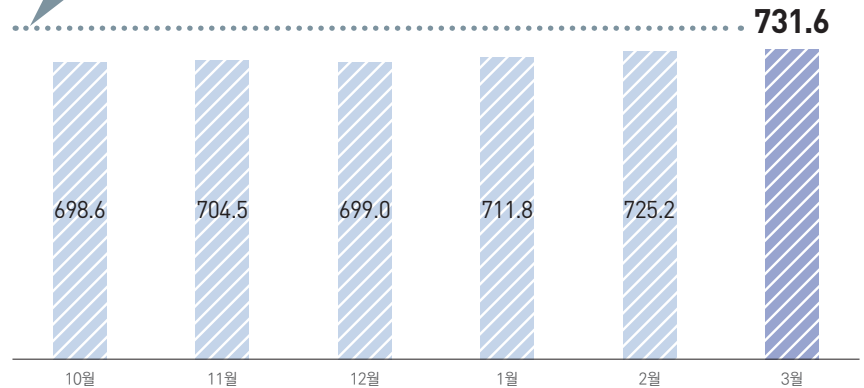
국가채무

• 2020년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731.6조원

2020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783.5조원



전월 대비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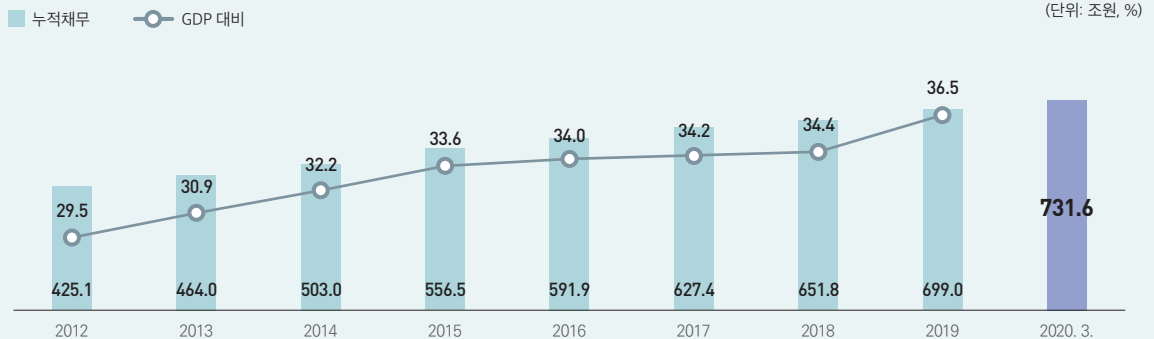
조원

전년 대비

+32.6

조원

주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함(2018년 국가채무는 680.5조원이며, 그중 지방정부 채무는 32.7조원임)
 2)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반영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국고보조금

정부는 일반기업이나 국민들이 시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에 관해 국가 차원에서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과 「e나라도움」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재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는 웹툰과 세부사업 설명자료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에서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웹툰을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통합검색** > **“국고보조금” 입력** > **사업설명자료**에는 총 3,293건의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설명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맞춤형 정보 > e나라도움**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는 **e나라도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나라도움」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eNaraDoom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일반국민', '연구자', '맞춤형', 'Mobile', 'English', and '사이트맵'. Below this is a header with the '열린재정' logo and various service categories. A red box highlights the 'e나라도움' (eNaraDoom) section, which includes links for '통계정보', '국고보조금', and '맞춤형서비스'. An arrow points from this section to the '통계센터' (Statistics Center) link in the main navigation bar.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arch bar, a '검색' button, and several service tiles including '보조금 혜택', '보조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and '보조금 업무처리 어려우셨나요?'. There's also a section for '민심가는 공개 열람이' (Public Open Access of Public Opinion) with various icons for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On the right side, there's a sidebar with a search bar, a '로그인' button, and a '회원가입' button. Below this, there's a '부정수급 제보센터' (Fraudulent Receipt Reporting Center) and a '보도자료' (Press Release) section. At the bottom, there's a '팝업존' (Pop-up Zone) with a '신동방통 e나라도움' (Shindongbang eNaraDoom) banner.

3 통계센터

e나라도움 > 통계센터 > 예산현황 / 집행현황 / 비교검색 /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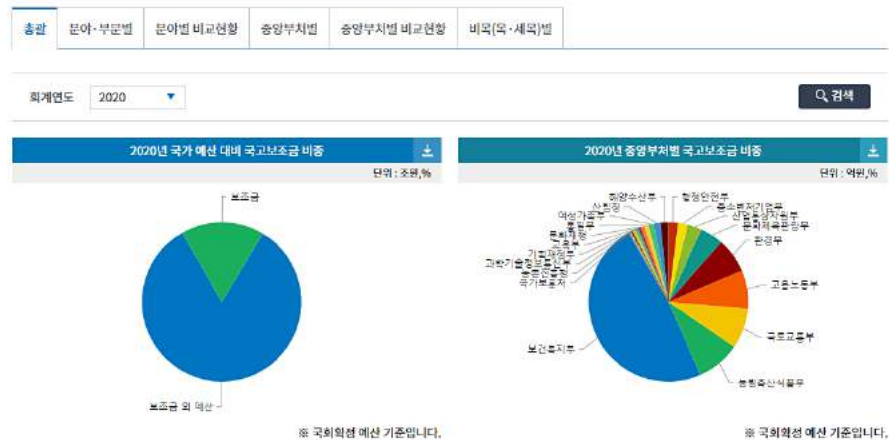
e나라도움의 통계센터에서는 국고보조금에 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합니다. 먼저 통계센터 > 예산현황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예산과 관련된 총괄, 분야·부문별, 분야별 비교현황, 중앙부처별, 중앙부처별 비교현황, 비목(목·세목)별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센터 > 집행현황에서는 예산현황과 같은 내역과 함께 추가적으로 내역사업별 집행 순위, 보조사업자별 순위 정보를 추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센터 > 비교검색**에서는 분야·부문별,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관련 비교지표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보조사업자 수, 세부사업 수, 내역사업 수)를 선택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통계센터 > 연도별 추이**에서는 연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추이 등이 있는 총괄페이지 부터 분야별,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추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나라도움」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 현황



연도별 추이



※ 국고보조금 추이는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15일 업데이트 됩니다.

※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정보는 어월액 등 조정을 포함한 예산정보로서 국회 확정 예산현상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

맞춤형 보조금 찾기

e나라도움 > 맞춤형 보조금 찾기 > 간편검색 / 조건검색 / 상세검색

e나라도움의 ‘맞춤형 보조금 찾기’에서는 간편검색, 조건검색, 상세검색 등의 기능을 통해 보조사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보조금 찾기 > 간편검색**에서는 나이, 성별, 지역, 주제별 항목을 입력해 검색하면 이와 관련된 내역사업과 보조사업이 나타나고, 보조사업 제목을 클릭하면 각 보조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보조금 찾기 > 조건검색**에서는 생애주기별, 대상별, 주제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검색은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간편검색**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택한 연령대와 관련된 내역사업과 보조사업을 확인할 수 있고, **대상별** 검색 역시 개인가구 구성유형별, 경제활동별, 소득기준별, 기업규모별, 교육단위별 항목 중 조회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검색을 클릭하면 선택한 항목에 관련된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제별검색**에서는 총 18개 주제¹ 중 조회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검색을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각 주제와 관련된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보조금 찾기 > 상세검색**에서는 **간편검색**, **조건검색**에 포함된 모든 항목들을 한 번에 선택하여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나라도움」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

나이 입력  50 세	성별 선택  ☒ 전체 ☐ 남성 ☐ 여성	지역별 선택  경기도 전체	주제별 선택  고용인정
--	---	--	---

검색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별
대상별
주제별

☐ 영·유아(0~5세)	☐ 아동(6~12세)	☐ 청소년(13~18세)
☐ 청년(19~29세)	☐ 중년(30~49세)	☐ 장년(50~64세)
☐ 노년(65세 이상)		

검색

¹ 18개 주제: 행정/통일/외교, 안전 보장, 교육 보장, 문화활동, 관광/휴양활동, 종교활동, 환경향상, 사회복지향상, 보훈향상, 고용안정, 주거안정, 보건/의료, 1차 산업지원, 산업/에너지지원, 국토개발지원, 교통/물류진흥, 방송/통신진흥, 과학기술진흥



「e나라도움」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 검색

선택한 검색 조건

검색조건 변경하기

나이(50세) 성별(전체) 경기도 전체 고용안정

내역사업 | 18건

보조사업 | 16건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등(자치단체세일센터) Q
고용노동부 2020-01-01~2020-12-31

보조사업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기금/지원) Q
경기도 2020-01-01~2024-12-31

통합사례관리사 지원(민간비) Q
보건복지부 2020-01-01~2020-12-31

보조사업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기금/지원) Q
경기도 2020-01-01~2024-12-31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 Q
농촌진흥청 2020-01-01~2020-12-31

보조사업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집단상담) Q
경기도 김포시 2020-01-01~2024-12-31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Q
산림청 2020-01-01~2020-12-31

보조사업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Q
경기도 의왕시 2020-01-01~2024-12-31

솔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Q
산림청 2020-01-01~2020-12-31

보조사업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집단상담프로그램)(기) Q
경기도 군포시 2020-01-01~2024-12-31

유아숲교육운영 Q
산림청 2020-01-01~2020-12-31

보조사업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자치단체) Q
경기도 광명시 2020-01-01~2024-12-31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Q
산림청 2020-01-01~2020-12-31

보조사업 >

인력운영비(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고용노동부)(국비) Q
경기도 평택시 2020-01-01~2024-12-31

맞춤형 검색

컨텐츠 업데이트 : 2020.04.08

보조사업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집단상담)

사업개요	사업명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집단상담)	사업연도	2020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사업기간	2020.01.01~2024.12.31
사업경로				
고용노동부 > 경기도 > 경기도 김포시				
사업내용	사업목적	알자리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알자리 창출로 여성고용 확대에성의 능력개발 기회 및 경제 자립기반 조성경력단절 여성의 자신감 회복 및 전로상담, 집단상담 등으로 열.가정양립을 위한 기반 구축		
	당해년도 사업비	21,816,000원		
	보조형태구분			
	주요사업내용	구연구직 상담, 집단상담 전로상담, 전로설계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취업상담항구 직업상담사 배치: 2명		
문의처	수혜대상 및 조건	[수혜대상] 경력단절여성 [수혜조건]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전로설계 및 상담 등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집단상담 운영		
	수행기관	경기도 김포시	담당부서	알자리경제과
문의처	전화번호	031-980-5991	홈페이지	http://www.gimpo.go.kr

※ 보조사업의 정보는 수행기관에서 관리

목록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나라살림**,
열린재정에서 확인하세요!

열린재정



열린 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이란?

국가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입니다.

열린재정은,
일반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
전문 연구자를 위한 깊이 있는 상세 정보,
내게 맞는 정보를 찾아보는 맞춤형 정보 등
다양한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희망주는 국고보조 믿음주는 투명관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보조사업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조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e나라도움

국민을 위한 행복·희망 도우미



www.gosims.go.kr



표준화·시스템화를 통해 모든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애주기별·대상별·주제별로
맞춤형 정보를 지원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꼼
하게

신청부터 심사, 선정, 집행, 정산까지 모든
보조사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합니다.

투명
하게

- e나라도움 상담센터 T. 1670-9595(국고국고)
- 온라인 사용자교육 cyber.gosims.go.kr
- 신통방통 e나라도움 인터넷카페 cafe.naver.com/enaratong
- e나라도움 유튜브 채널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or e나라도움](#)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공모

정연중 e나라도움운영본부 과장(yj1204@kpfis.or.kr)

이지은 e나라도움운영본부 사원(jieun@kpfis.or.kr)



1 _____ 개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2017년 7월 개통)은 정부 내 모든 보조금의 예산 편성에서 교부,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의 모든 처리 과정을 전자화, 정보화하여 보조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2020년 정부 예산 512.3조 중 국고보조금 예산은 86.7조로 16.9%를 차지하며, 2019년(77.9조)에 비해 11.3% 증가하는 등 매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_____ 공모 소개

보조사업 공모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개별 기준을 정하여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에 따라 공모의 신청 및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e나라도움은 그동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각 기관별로 안내되었던 개별 공모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공모 신청자들이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장은 공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중앙관서의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관서의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공모 절차를 표준화·전산화함으로써, 공모를 위한 사업 공고와 신청, 사업자 선정 및 심의까지의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33개 기관에서 e나라도움의 공모 기능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왔으며, 월 평균 100여 건의 공모가 진행되어 매년 5천여 명의 보조사업자가 공모에 선정,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연도별 e나라도움 공모사업 및 사업자 선정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전체	월평균	전체	월평균	전체	월평균
게시	1,129	94	1,265	105	1,258	105
선정	3,773	314	5,250	438	5,744	479

주 1) 기준일: 2019.12.31.

2) 기관 자체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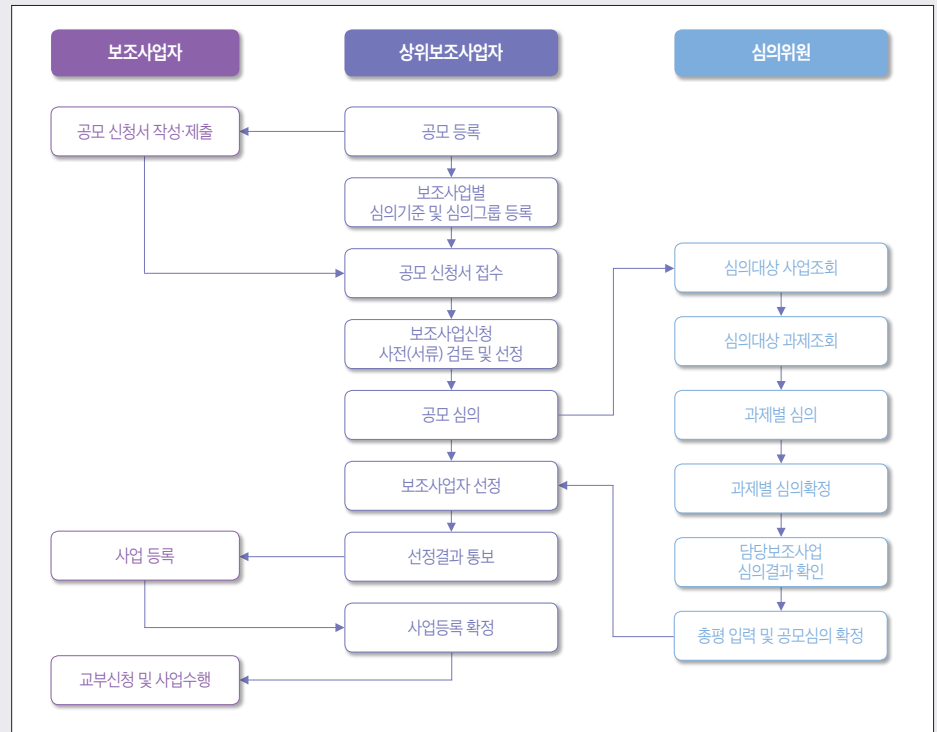
3. 공모 절차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모 내용(공모명, 사업 개요·기간·목적, 접수방법, 선정기준, 절차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공모 신청을 원하는 개인·단체 등은 공모의 내용을 확인 후 e나라도움을 통해 해당 공모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e나라도움은 포털을 통하여 진행 중인 모든 공모사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e나라도움 회원가입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다.



그림 1. e나라도움 공모사업 프로세스



1. 공모사업 등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나라도움에서는 공모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위보조사업자(중앙·지자체 등 공모 기관 담당자)는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 동법 제 17조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

※ e나라도움 내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①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와 ② 자체 시스템 등을 활용한 공모, 2가지의 방법이 있다.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는 e나라도움을 통해서 공모를 게시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사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자체 시스템을 활용한 공모는 기관 자체적으로 공모를 진행 후,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보조사업을 생성하고 관리한다.

2. 공모사업 신청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는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를 조회·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림 2. e나라도움 포털 - 공모사업 찾기

공모사업 찾기

공모된 사업에 대한 공모신청은 e나라도움 시스템 화면 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 **회원가입** 및 **공모 신청** 방법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나라도움 소개 > 매뉴얼 > 사용자 매뉴얼 | 회원가입 및 권한신청, 공모 및 사업관리)

[회원가입 하기](#)

사업연도: 전체 분야선택: 전체

기간: ☒ 공모기간 ☐ 접수기간 ~ 1주 1개월 3년 10년도 10년도

공모기관: 전체

공모명: ☒ 신청가능공모

[검색](#)

총 69건

번호	공모기관	공모명	공모기간	접수기간	조회수
89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미술주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2020-03-26 ~ 2020-04-27	2020-03-26 ~ 2020-04-27	26
88	(사) 한국컨텐츠진흥원	유기촉진 컨설팅 및 포럼 매뉴얼 개발	2020-03-26 ~ 2020-04-09	2020-03-26 ~ 2020-04-09	1
87	농림축산식품부	(재공모)유기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해외(EU) 수출지원	2020-03-26 ~ 2020-04-09	2020-03-26 ~ 2020-04-09	0
86	국가보훈처	2020년 고령 국가유공자 건강 문화 프로그램 지원	2020-03-25 ~ 2020-04-16	2020-03-25 ~ 2020-04-16	31

그림 3. e나라도움 포털 - 실시간 검색 TOP10

실시간 검색 TOP10

인기 공모사업 최신등록 공모사업

1 2020 태권도 소재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공고
태권도진흥재단
2020-02-19~2020-04-16
[자세히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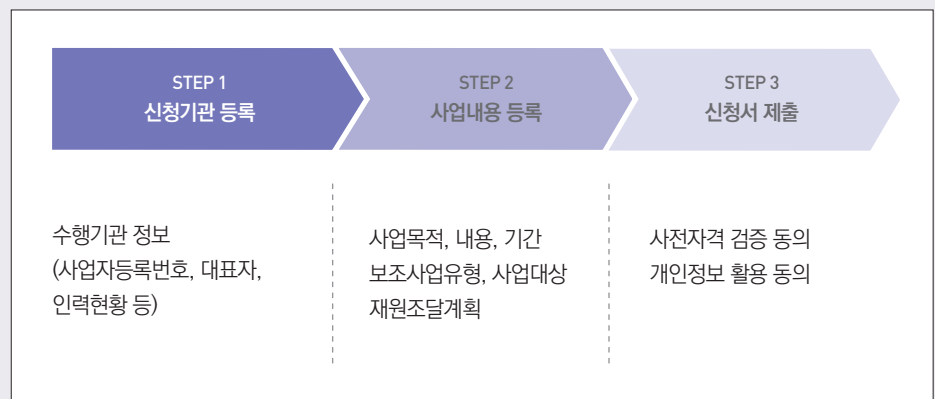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우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020-02-27~2020-04-27
[자세히보기](#)

3 <2020 문화동반자사업> 전문연수 운영기관 공모
(제)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02-28~2020-04-14
[자세히보기](#)

순위	공모기관	공모명	접수기간	등록일
4	태권도진흥재단	2020 태권도 소재 연계 활동 제작 지원사업 공고	2020-02-19~2020-05-13	2020-02-19
5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미술주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2020-03-26~2020-04-27	2020-03-20
6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콘텐츠 기업 연계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온라인 2차)	2020-04-01~2020-05-04	2020-03-30
7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20년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모집공고(안)	2020-03-31~2020-04-14	2020-03-30
8	울산광역시 등구	제4회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공고	2020-02-07~2020-12-31	2020-02-07
9	한국콘텐츠진흥원	[본편] 2020년 방송영상콘텐츠 포럼 본편 제작지원	2020-03-16~2020-04-08	2020-02-13
10	국가보훈처	2020년 고령 국가유공자 건강 문화 프로그램 지원 재공모	2020-03-25~2020-04-16	2020-03-24

e나라도움에 게시된 공모사업에 참여하려는 보조사업자는 회원가입 후 보조사업자 권한을 부여받아 공모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공모는 공모 기관이 설정한 마감기한이 되면 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마감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e나라도움 공모신청서는 신청기관 정보 등록, 공모사업 내용 등록, 신청서 제출(자격 검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 e나라도움 공모 신청 단계별 입력항목



3. 공모 심의

심의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공모사업의 분야 및 제척 기준, 기관별 심의 기준을 등록하면 공모 기관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심의위원이 심의 수행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서 심의위원으로 설정한 인원수에 맞게 랜덤 추출이 가능하다.

또한, 공모 기관에서 공모를 게시한 이후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있다. ① 해당 사업의 심의 기준 및 심의그룹 등록 ② 신청서 접수 후 사전(서류)검토 진행(생략 가능) ③ 보조사업자별 심의그룹 설정 ④ 가점, 감점 기준 등록 후 공모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심의위원에게는 대상사업(공모) 정보와 보조사업자들이 제출한 공모 신청서 목록이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화면에 표시된다. 심의위원별 심의를 진행하고 평가, 총평을 기입하면 심의위원장이 총평 입력과 함께 최종심의 확정을 하게 된다. 심의가 확정되면 공모 기관 담당자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4. 공모 선정

공모 기관 담당자는 심의 결과를 확인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 유선 및 SMS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들은 e나라도움에서 선정된 사업을 조회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세부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 등 추가 자료를 등록하여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을 통하여 보조사업을 생성하고, 교부신청, 집행, 정산, 정보공시 등 보조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공모 관련 주요 기능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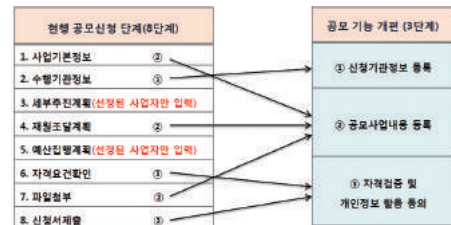
e나라도움은 시스템 오픈 이후 사용자가 보다 쉽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모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편의성 개선을 추진하였다.

① One-Stop 공모 신청(2018년)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e나라도움 포털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참여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을 손쉽게 검색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을 통해 바로 공모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공모 신청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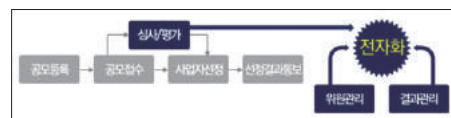
② 절차 간소화(2019년)

공모 신청 시 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신청사항을 표준화하고, 복잡한 단계를 통합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모 신청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③ 공모 심의기능(2019년)

각 기관에서 자체 진행되었던 공모 심의 기능을 추가하여 공모 신청부터 보조사업자 선정까지 공모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였다.





4 ————— 맺음말

2017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한 e나라도움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특히, 공모 기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처음 접하게 되는 업무로서, 보다 쉬우면서 간소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분야이다. 이에,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장간담회, 시연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공모 절차 간소화 및 공모 신청화면의 가독성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심의 기능을 온라인으로 구현함으로써 공모 기관 사용자의 편의성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기여하였다.

e나라도움은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사용자와 소통하며, 보다 쉽고 간결한 프로세스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손쉬운 보조사업 참여 신청 및 투명한 사업자 선정 등 보다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모 기관은 물론, 보조사업자 등 모든 이용자가 만족하는 e나라도움으로 거듭날 것이다.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한 달 동안 '재난지원'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이달의 이슈키워드

재난지원



연관어

긴급재난지원금 — 재난기본소득 — 지원금 — 재난지원금 — 안전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 기본소득 — 극복 — 재난관리기금 — 코로나19 — 생계 — 수당 — 긴급재난문자 — 대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20.4.20.), 수집기간: 2020.3.16.~4.15.

정부는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재난 발생에 선제·적극적 투자를 확대하고 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난¹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감염병 등과 같은 사회재난²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재난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대비·대응 인프라 확충,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복구지원체계 운영 등으로 재난 지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도 재난지원 관련 주요 사업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의 대비·예방, 대응·복구 등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일정 금액, 물품 등을 지급하는 직접지원³, 이재민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간접지원⁴, 자연재난에 대한 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재난보험 정책⁵ 등을 통해 재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난복구 지원 사업에 567억원을 편성하였다.

재난복구 지원 사업 예산

단위사업 명	주요 세부사업	지출액 (단위: 억원)
재난복구 지원 	재난대책비(보조)	360
	재난구호 지원	6
	풍수해보험	192
	재난 심리회복 지원	9
	합계	567

자료: 행정안전부,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자료 재구성

¹ 태풍, 홍수, 해일, 한파, 낙뢰, 가뭄, 폭염 등과 같은 재난을 의미한다.

²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 감염병, 미세먼지 등과 같은 재난을 의미한다.

³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 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이재민 구호, 의연금 등을 의미한다.

⁴ 전기·수도 등 공과금 면제, 국제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등을 의미한다.

⁵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선보험, 어선원보험 등을 의미한다.

재난복구 지원 사업의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재난대책비(360억원), 재난구호 지원(6억원), 풍수해⁶보험(192억원), 재난 심리회복 지원(9억원) 등이 있다.

▶ 재난대책비

정부는 2020년 재난대책비 사업으로 360억원을 편성하였다. 재난대책비 사업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난지원금을 통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⁷를 통해 재난지수에 맞는 등급을 산정하여 지원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이재민 구호, 재난복구사업, 가뭄대책, 제설비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

▶ 재난구호 지원

재난구호 지원 사업은 2020년 6억원 규모이며, 구호활동 봉사자 급·간식비 및 소모용품, 재해구호물품 및 재해구호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구호기관의 신속한 구호 및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구호활동 및 봉사자에 대한 구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재난구호 지원 사업의 기부금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재난유형별, 피해규모별 배분 항목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여, 기부금의 신속하고 적절한 배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 풍수해보험

2020년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192억원을 편성하여,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과 풍수해보험 등 운영 사업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의 소유자이며, 소유자 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2~3년과 같이 장기계약도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등 운영 사업은 재난보험(풍수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도 지원한다.

▶ 재난 심리회복 지원

2020년 재난 심리회복 지원 사업은 9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재난피해자, 가족, 지역주민 등 재난경험자가 재난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재난 이전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재난심리회복전문가 인력 풀(Pool)의 구성을 통해 재난경험자의 충격을 해소하고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재난피해 지역의 피해회복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책의 효과 분석 및 개선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가 내·외로의 이동이 극도로 위축되는 등 전 세계적인 경제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생산, 투자, 소비의 감소가 발생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위축이 국민경제에도 타격을 주면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국민들의 소득·생계 보장, 소비 진작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였다.

2020년 재난지원 관련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증액 (단위: 조원)
제1회	특별재난 지역 후속지원	1.0
제2회	긴급재난지원금	12.2

주: 중앙정부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2020),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보도자료」 재구성

▶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특별재난 지역 후속지원으로 1.0조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 3월 15일에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청도·경산·봉화의 원활한 복구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0.4조원을 재난대책비로 편성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한 점포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0.2조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6개월간 특별재난 지역 내 소상공인 대상 전기료 50% 감면, 3개월간 저소득층(하위50%)의 건강보험료 50% 경감을 지원한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2.2조원의 규모로 편성되었다. 지원대상은 전 국민 대상으로 동일생계 기준⁶ 2,171만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정 40만원, 2인 가정 60만원, 3인 가정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 확인 후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신청가능하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83만)는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1.3조원을 5월 4일에 지급하였다. 그 외 지원대상의 지급시기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신청을 시작하여 13일에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신청은 5월 18일부터 세대주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⁶ 태풍 등 강풍에 의한 재해와 홍수 등 물에 의한 재해를 의미한다.

⁷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1항 관련 기준표를 의미한다.

⁸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을 의미한다.

OECD는 연간 2회(5월, 11월)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를 발간하고, 주요국(G20 국가, 한국 포함) 대상으로는 추가 연 2회(3월, 9월) 수정 경제전망에 해당하는 중간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를 발간한다. 이번호에서는 최근 3월 발표된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Coronavirus The World Economy at Risk」의 2020년 중간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과 주요 국가의 정책 고려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2020 OECD
중간 경제전망



Coronavirus The World Economy at Risk



세계 경제전망

OECD는 올해 3월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4%로, 2019년 11월 예상치인 2.9%보다 0.5%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관광업, 금융시장, 경제심리 등이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영향을 받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보다 0.8%p 감소한 4.9%로 예상하였다. 즉, 봉쇄조치 등에 따른 노동 이동, 관광 제한이 생산 차질 및 서비스 부분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1년에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3.3%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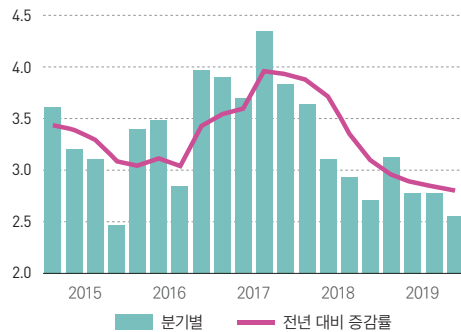
	2019	2020		2021	
		중간 전망	조정폭	중간 전망	조정폭
세계	2.9	2.4	-0.5	3.3	0.3
G20	3.1	2.7	-0.5	3.5	0.2
호주	1.7	1.8	-0.5	2.6	0.3
캐나다	1.6	1.3	-0.3	1.9	0.2
유로존	1.2	0.8	-0.3	1.2	0.0
독일	0.6	0.3	-0.1	0.9	0.0
프랑스	1.3	0.9	-0.3	1.4	0.2
이탈리아	0.2	0.0	-0.4	0.5	0.0
일본	0.7	0.2	-0.4	0.7	0.0
한국	2.0	2.0	-0.3	2.3	0.0
멕시코	-0.1	0.7	-0.5	1.4	-0.2
터키	0.9	2.7	-0.3	3.3	0.1
영국	1.4	0.8	-0.2	0.8	-0.4
미국	2.3	1.9	-0.1	2.1	0.1
아르헨티나	-2.7	-2.0	-0.3	0.7	0.0
브라질	1.1	1.7	0.0	1.8	0.0
중국	6.1	4.9	-0.8	6.4	0.9
인도	4.9	5.1	-1.1	5.6	-0.8
인도네시아	5.0	4.8	-0.2	5.1	0.0
러시아	1.0	1.2	-0.4	1.3	-0.1
사우디아라비아	0.0	1.4	0.0	1.9	0.5
남아프리카공화국	0.3	0.6	-0.6	1.0	-0.3

자료: OECD(2019),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기 성장은 부진하였다. 2019년 4분기 세계 GDP 성장률은 파업, 사회불안, 자연재해 등으로 2.5%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세계 무역량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올해 초까지도 경기는 매우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그림 1과 같이 선진국 신규주문 증가 등 제조 및 서비스업은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OECD는 지난 1월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가 글로벌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간 세계 GDP 성장률을 0.1%p 개선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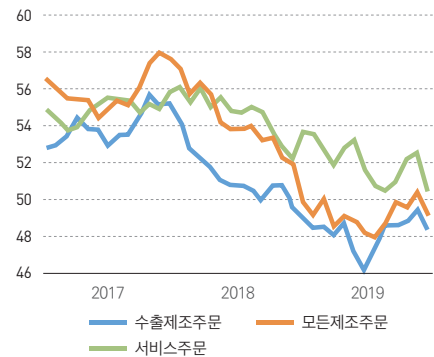
그림 1. 세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선진국 신규주문 추이

(단위: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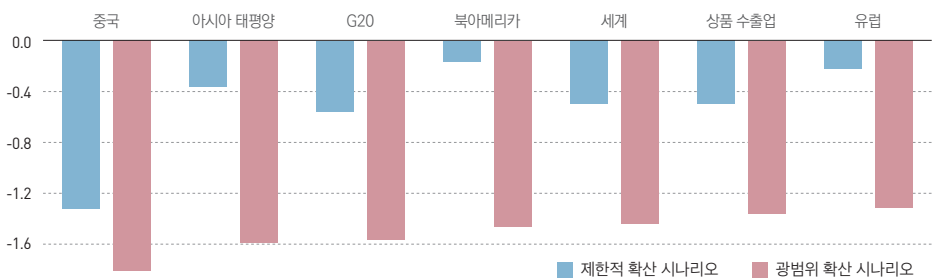


주: PMI란 구매관리지수(Purchasing Manager Index)로 제조업 부문 구매관리자의 활동성 측정 지수
 자료: OECD(2020), 「Coronavirus: The World Economy at Risk」

지난 1월 발발한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전망을 악화시켰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국의 생산 활동 제약은 생산·용역 및 여행·출장의 감소와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과 투자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OECD는 향후 성장 전망은 불확실하나 코로나19 사태가 1분기 이후 완화될 경우, 2020년 세계 GDP 성장률은 작년 하반기 예상치 대비 0.5%p 하락한 2.4%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림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세계 GDP 성장률 변화

(단위: %p)



자료: OECD(2020), 「Coronavirus: The World Economy at Risk」

주요 국가별 성장 전망



한국 일본·호주 등과 같이 중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만큼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

* 2020년 성장률 2.0%(2019년 11월 전망 대비 0.3%p 하락)

2021년 성장률 2.3%(2019년 11월 전망과 동일)



중국 코로나19가 1/4분기 이후 진정되더라도 상반기 성장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며
2020년 연간 4.9% 성장에 그칠 전망

* 2020년 성장률 4.9%(2019년 11월 전망 대비 0.4%p 하락)
2021년 성장률 6.4%(2019년 11월 전망 대비 0.9%p 증가)



미국 중국 경제와의 밀접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제심리 위축, 공급망 차질, 대외
수요 둔화 등으로 성장 하향조정

* 2020년 성장률 1.9%(2019년 11월 전망 대비 0.1%p 하락)
2021년 성장률 2.1%(2019년 11월 전망 대비 0.1%p 증가)



유로존 코로나19가 2020년 상반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2020~2021년 중
1% 내외의 둔화된 성장이 이어질 전망

* 2020년 성장률 0.8%(2019년 11월 전망 대비 0.3%p 하락)
2021년 성장률 1.2%(2019년 11월 전망과 동일)

주요 경기 하방위험 요인

OECD는 경기 하방위험 요인으로 코로나19, 무역 갈등, 영국·EU관계, 금융 불안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전염이 아태지역·유럽·북미 등으로 확산·장기화될 경우 세계 GDP 성장률의 1.5%p 하락을 예측하였다. 또한, 1단계 미국과 중국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수준의 추가 합의는 불확실하며,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을 내다보았다.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행기간(~2020년 말) 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영국과 EU 간 무역이 WTO 수준으로 회귀할 경우 단기 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코로나19 전염 확산으로 경제 성장 둔화, 높은 기업부채, 신용도 하락세 등은 기업부채 부실화 등 금융 불안을 초래하여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적 권고 사항

OECD는 세계 경제 성장 약화 및 코로나19 등 하방위험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바이러스 확산 방지, 의료시스템 강화, 경제 심리회복, 공급충격 완화 등을 위한 각국의 정책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중국 등 코로나19 영향이 큰 국가들은 공중보건 조치 지원, 기업·노동자의 단기 피해지원 등 선별적 조치를 주문하였다. 둘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장기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셋째, 공공부문 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코로나19 장기화 등 하방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전 세계적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 편성하기도 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위기관리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과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담당자를 만나 보았습니다.

담당: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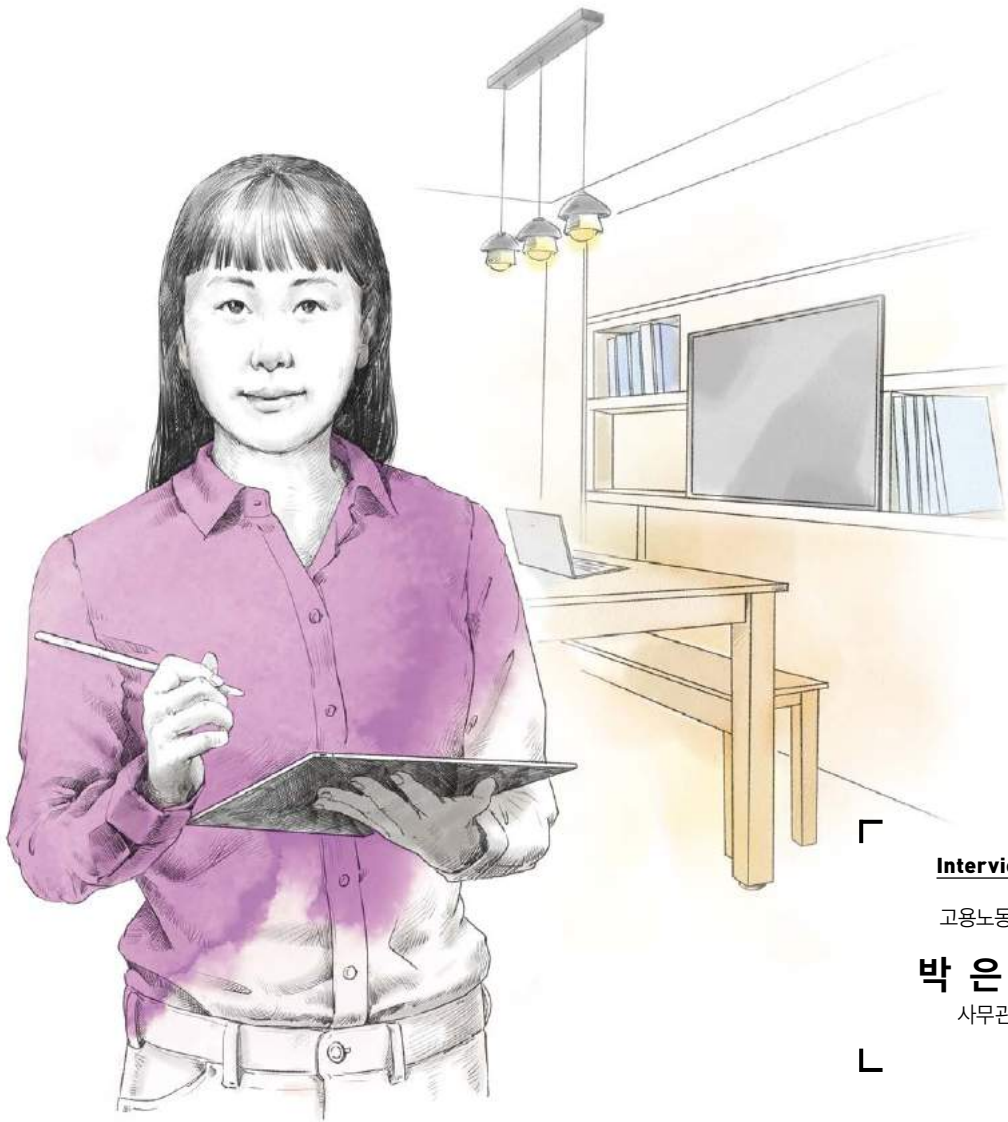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둔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중 하나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은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7년 9월에 신설되었고 한 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고용노동부 박은정 사무관을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이끌어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2010년 10월에 고용노동부에 발령받은 박은정 사무관은 그간 국가기술자격 및 숙련기술 장려, 청년고용정책, 고령자고용정책,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왔다. 현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에서 총괄적인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의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그 예로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과 사회적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용위기



Interview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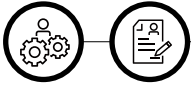
박 은 정

사무관

지역·산업위기 대응 지역의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과세소득 3억 이상 고소득 사업주이거나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요건은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다. 이때 보수액은 노동자에게 지급된 기본급, 통상적인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보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일용노동자인 경우에는 월 실근무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



여야 합니다. 또 기존 재직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저하되면 안 되고, 고용유지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경영 어려움을 돕는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추가경정예산에 확대 반영되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9만원이 지급되었다. 여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2~5월 근로분에 대해서 10인 미만 사업체에 7만원, 10인 이상 사업체에 4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즉 5인 미만 사업체는 최대 18만원, 5~9인 미만 사업체는 16만원, 10인 이상 사업체는 13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2~5월 근무에 한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시적인 지원금 인상 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하여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그간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사업장이 일부 휴업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상황에 대응하여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휴업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시적으로 추가된 지원금과 유급 휴직·휴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확대는 영세사업장이 고용유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정 사무관은 어려운 시기에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상공인들에게 되도록 빨리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 간소화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나아가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소기업 일자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정책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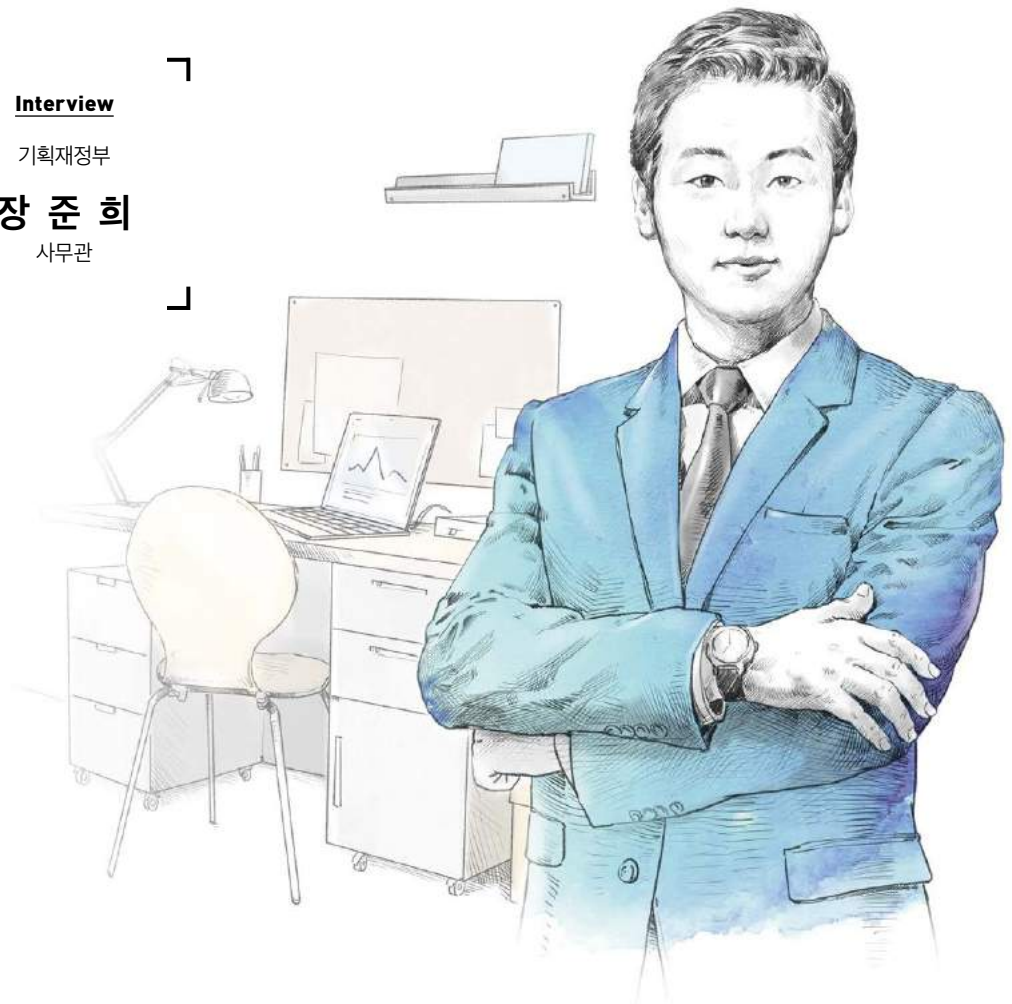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경제·재정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논의기구다. 2003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확대·개편하면서 현재 형태의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시작되었고, 올해에도 16차례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이끌어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준희 사무관을 만났다.

Interview

기획재정부

장 준 희

사무관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준희 사무관은 2017년 기획재정부에 입부하여 올해로 4년째 근무해왔다. 현재는 정책 조정총괄과에서 분야별 경제정책 협의·조정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의 논의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경제 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 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둘째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의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 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셋째로는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부처에서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전 및 보고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의장인 부총리 외에 16개 부처 장관(또는 장관급),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회의 구성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도 수시 참여하는 등 참여인원을 유연하고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요 사항이나 긴급한 현안에 대응할 수 있게 혁신성장전략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등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매주 수요일 개최를 원칙(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목요일 개최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 이전 실무조정회의, 차관조정회의 등을 거쳐 관련 부처 간 의견을 사전 조율하고, 해당 내용을 주관 부처에서 회의에 보고한 후 참석 장관들의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발표하게 됩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발 빠른 변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경제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하면서, 지난 3월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신설된 것이다. 이에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되었다. 위기 대응과 직접 연관된 부처로 참석 범위를 소폭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비상경제회의 사전조율 안전과 시장점검·긴급지원 등 경제위기 대응 안전으로 논제를 집중시켰다.



“지금까지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 및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총 245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과 349조원 규모의 간접 지원(만기 연장, 납부 유예, 달러 유동성 공급 등)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큰 틀의 지원 프레임 마련한 정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상시적 위기관리 및 비상경제 본격적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즉, 경제중대본으로 확대·전환하였습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이전의 경제관계장관회의(또는 위기관리대책회의)와는 달리 산하 거시·산업·금융·고용 대응반을 설치하여 매주 분야별 동향, 이슈, 현장의 애로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경제단체장, 관련기관장, 당청관계자 등도 참석해서 실행력 높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회의 종료 시 경제대변인 격인 기획재정부 1차관이 관계 부처와 함께 경제동향 및 회의 결과에 대해 대국민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진행된 제2차 비상경제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과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이 논의되었다. 우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그간 특별고용 지원 업종 추가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 구직급여 지원 확대 등 고용보험을 활용해 강력하게 시행한 고용충격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 1.5조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6월부터 잠정 시행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의 디지털화·비대면화 대응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이처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위기 대책들을 과감하게 결정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비전과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장준희 사무관에게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력에 대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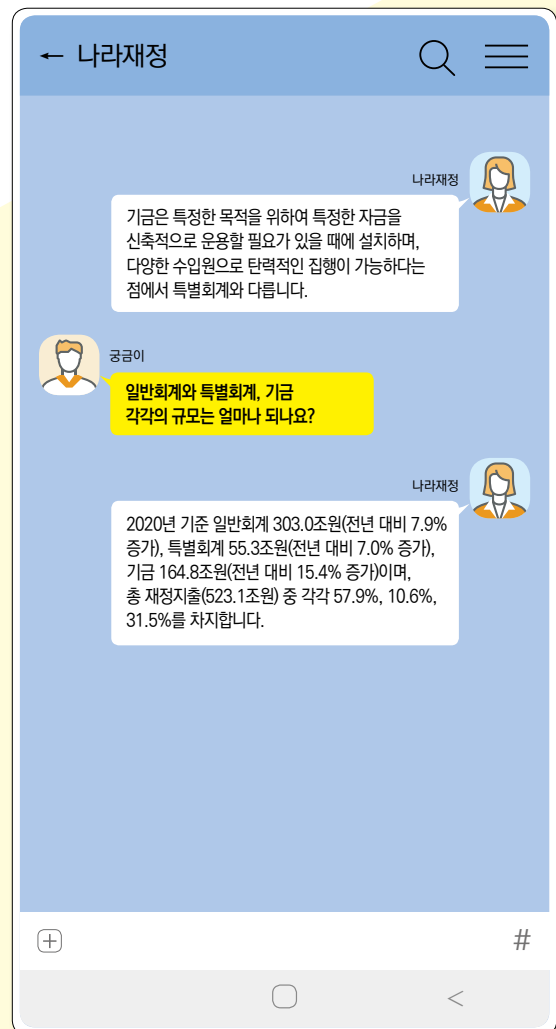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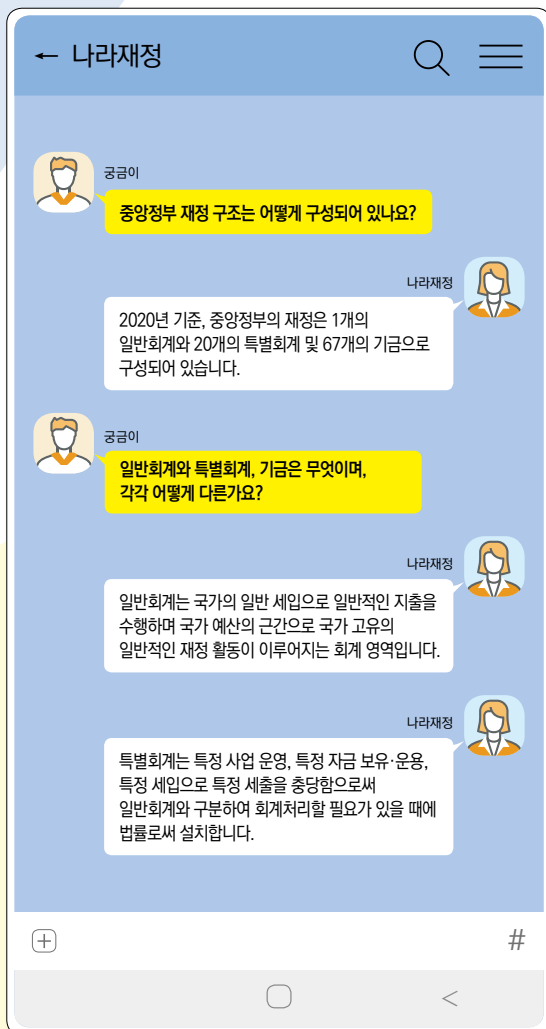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사항이 실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종 대책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기재부 1차관 주재의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현황 등을 점검·공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준희 사무관은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확대·전환되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 만큼 다른 어떤 목표보다도 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조속한 경제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국가재정은 어떤 구조로 운용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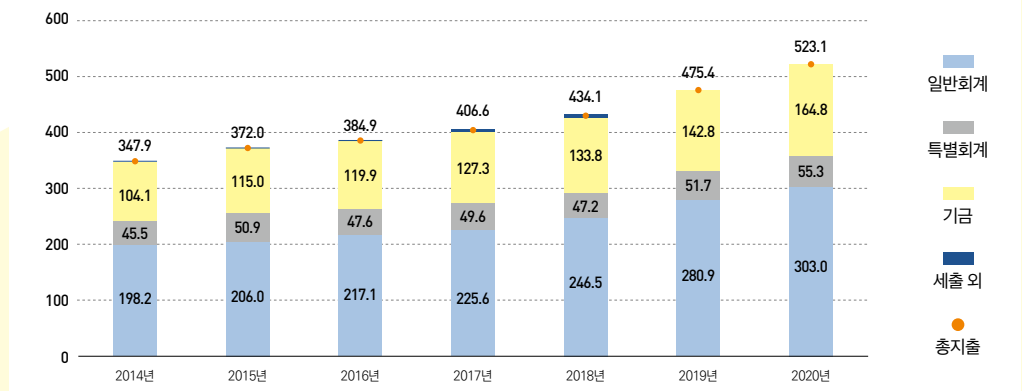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 세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며,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합니다. 기금은 동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로 설치합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규모 추이

(단위: 조원)



주 1) 2018년까지 결산, 2019년, 2020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세출 외는 자치단체교부금 정산 등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달의 월급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여 이달의 생활비를 위한 주거·래 통장 외에도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재테크를 위한 적금통장 등 용도에 따라 통장을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국가재정도 비슷한 구조로 운용됩니다.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일반회계 외에도 목적과 용도에 따라 20개의 특별회계와 67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관리합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며,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 사업 운영, 특정 자금 보유·운용, 특정 세입 등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합니다. 또한, 동법 제5조에 따르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회계는 국가 예산의 근간으로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회계 영역인 반면,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연계를 통한 특정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차제 사업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목적세를 주요 세입원으로 하여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확충과 관리·운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운용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비슷하지만, 부담금, 출연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탄력적인 집행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국가재정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303.0조원(전년 대비 7.9% 증가), 특별회계 55.3조원(전년 대비 7.0% 증가), 기금 164.8조원(전년 대비 15.4% 증가)이며, 총 재정지출(523.1조원) 중 일반회계 57.9%, 특별회계 10.6%, 기금이 31.5%를 차지합니다.

¹ 주요 항목 기준 20% 범위 이내(금융성 기금 사업비 20%)의 운용 계획 변경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행정부 내부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주요 항목의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 세부항목 변경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기금관리 주체의 자율적인 변경이 허용된다. 그러나 주요 항목 기준 20%(금융성 기금 사업비 30%)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국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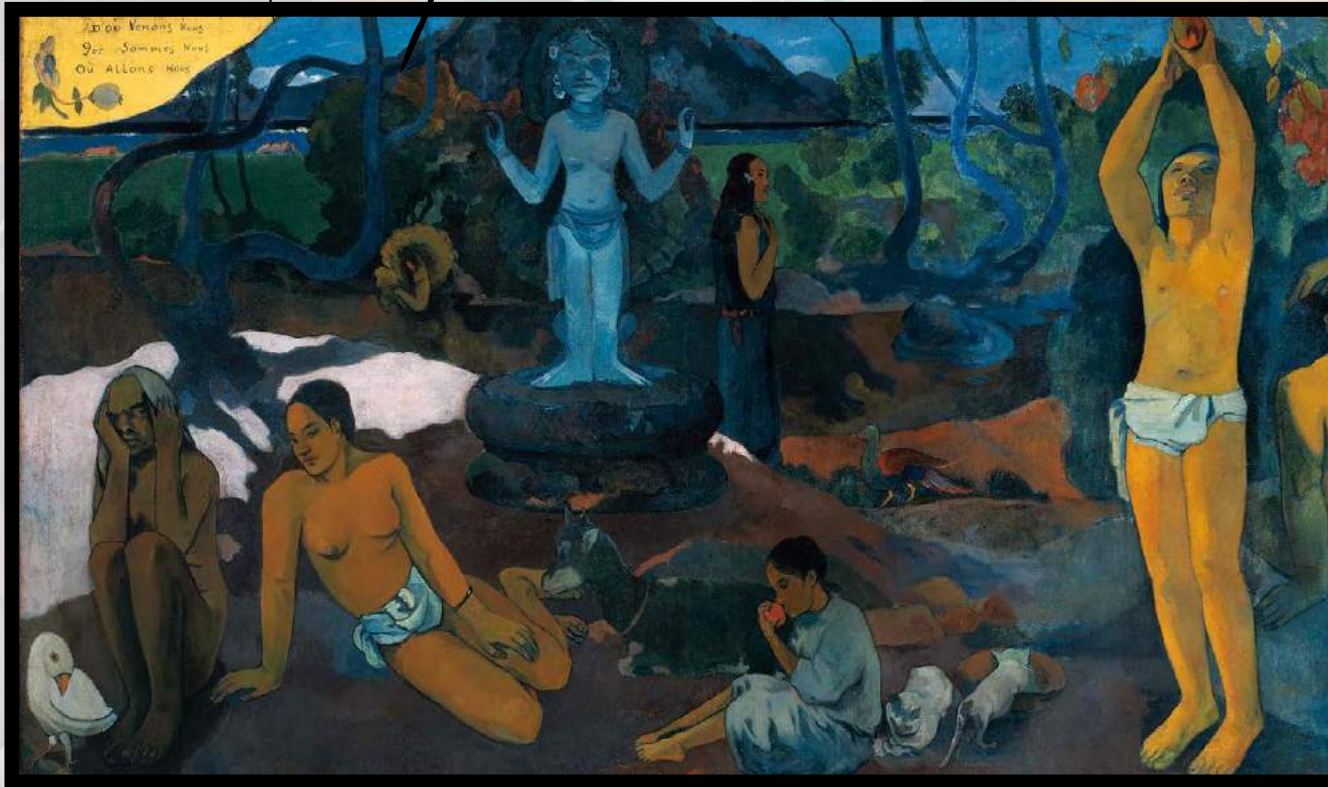
재정 STORY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유럽의 장기 불황 속 실업자가 된 폴 고갱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Paul Gaugu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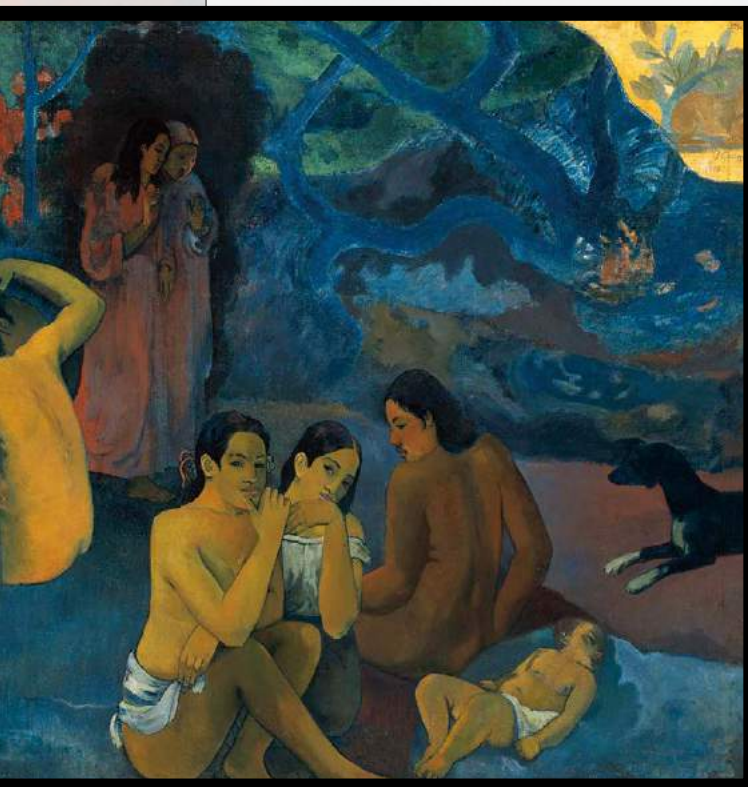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Pandemic)에 의한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일시에 폐쇄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경제위축의 부정적 효과는 대공황을 넘어서는 경기침체를 유발할지도 모른다. 경기의 부침(浮沈)은 자본주의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늘 있어왔다. 19세기 후반의 유럽의 불황은 우연히도 폴 고갱(Paul Gauguin, 1848~1903)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고갱의 그림은 강렬한 색채와 장식적인 구도를 통해서 인간이 처한 환경적 조건과 삶 자체를 단번에 우리의 뇌리에 각인시킨다. 학창 시절에 우연히 천경자 화백의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그림 속에서 즉시 고갱의 색채를 보았었다. 그만큼 고갱의 원시적 색감은 강렬하다. 고갱의 치열한 삶과 열정은 문호 서머셋 모엄(Sommerset Maugham)이 소설로 형상화했는데 그 작품이 바로 <달과 6펜스(The Moon and Six Pence)>이다. 이 작품은 역설적으로 고갱을 신화적 존재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의 진면목을 못 보게 만든

다는 비평도 있다.

고갱은 화가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특이한 삶을 체험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일생을 세계 이곳저곳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한곳에 오래 정착하여 살지 못했다. 그림 그리는 작업 역시 20대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하였다.



Paul Gauguin,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1897, Oil on canvas,
139 × 375cm,
Museum of Fine Arts in Boston

젊지 않은 나이에 정규적 미술교육을 받은 적도 없이, 미술에 대한 열망과 흥미로 예술가로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처음 고갱은 풍경화를 위주로 그림을 그렸다. 그는 회화 작업을 하면서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거나 살롱에 입선되기도 할 정도로 그 실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그는 인상파 화가 피사로(Camille Pissarro, 1830~1903)를 알게 된 후, 1880년 인상파전에 참가하면서 드디어 화단에 입문하게 된다.

고갱은 당시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의 직업은 금융거래소의 직원이었다. 그림은 일종의 부업과도 같았다. 고갱은 이처럼 30대 초반까지는 파리에서 증권회사에 다니며 틈틈이 그림을 수집하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뒤바꿔놓은 것은 경제적 상황의 반전이였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갑자기 들이닥친 프랑스 금융시장의 붕괴였다. 1882년 11월 프랑스의 주식시장은 대폭락 장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요새로 말하면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쯤 되는 사건이었다.

1882년의 프랑스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주식거래인인 고갱의 직업도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고갱의 인생역정은 화가의 길로 바뀌게 된다. 그는 선배 화가 피사로와 의논하여 이듬해인 1883년 35세에 금융회사를 그만두고 그림에 전념하게 되는데, 고갱 자신이 이때가 아니면 전문 화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갱의 일생에서는 일대 사건이었다.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개인의 직업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다.

경제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1873~1896년 기간은 소위 장기대침체 시대(Long Depression)였다. 187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리고 1882년 파리에서 주식 폭락 사태가 일어났고 뒤이어 경기침체와 물가 하락이 지속되었다. 물가 하락은 일련의 주식 폭락 사태를 불렀다. 당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자 노동자 문제와 빈부격차가 심각해졌다. 경제가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악화되는 실업, 심화되는 자본의 집중, 파업의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 이전의 소위 고전적 자본주의 시대에서도 경기순환(Business Cycle)에 의해서 호황기와 불황기가 시차를 두고 반복되는 경기변동을 겪었다. 산업혁명에 의해서 산업자본주의가 발흥하기 이전에 상업자본주의 시대에도 경기의 부침 현상은 나타났고 가격폭등 같은 버블현상도 있었다. 가령, 국제교역이 번성했던 1630년대의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튜립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튜립 한 뿌리가 같은 무게의 금값보다 비쌀 정도였다. 반면에 1929년

**1882년의 프랑스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주식거래인인
고갱의 직업도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고갱의 인생역정은 화가의 길로 바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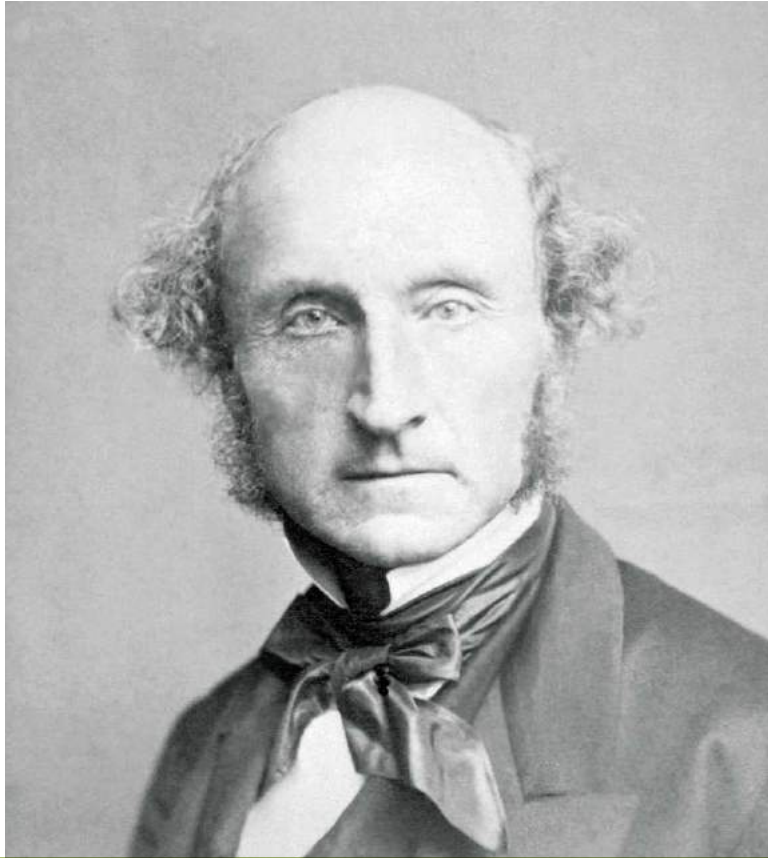


에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의 주식 대폭락에 의해서 촉발된 대공황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프랑스 경기침체로 금융회사 직원에서 실업자로 전락한 고갱은 전업 화가로 변신하였지만 화가로서 살아가기는 녹록치 않았다. 그는 1886년에 그림에 전념하기 위해서 브르타뉴의 퐁타방(Pont Aven)으로 이사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인상파 화풍을 버리고 고갱 특유의 야수파적인 색감과 장식적인 화법을 지향하여 <황색의 그리스도(The Yellow Christ)> 같은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그는 1888년 남불(南佛) 아를(Arles)로 내려가 반 고흐(Vincent van Gogh)와 함께 1년 정도 생활하다가 결별한다. 이때의 스토리는 1956년의 영화 <열정의 랩소디(Lust for Life)>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고갱은 산업화된 프랑스에서의 생활에 염증을 느끼면서 원시적 자연을 동경하였고, 결국 1891년 남태평양의 타히티(Tahiti)섬으로 향한다. 그는 원시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들 속에서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당시 타히티는 그의 이상과 달리 척박한 곳이었고 고갱은 여기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그는 2년 후 파리로 돌아와 타히티에서 그린 작품으로 개인전을 열었지만 실패하였다.

1895년 다시 타히티로 돌아온 고갱은 파리에서 겪었던 패배감으로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는데, 이때 마지막 유언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1897>이다. 산업화된 세계에 대한 혐오감으로 타히티섬으로 떠났던 고갱의 그림은 결국 물질주의에 물들지 않은 원주민의 순수한 인간성과 열대의 강렬한 색채로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 주식시장에 급격한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평생 주식 중개업을 하면서 아마추어 화가로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예술사에서 흥미로운 아이러니 중의 하나다.



(1806~1873)

John Stuart Mill

사 회 주 의 의 선 구 자

존 스튜어트 밀

글: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존 스튜어트 밀은 19세기 중반
자유무역을 통해서 자유주의가 꽃을
피우던 시기에 반(反)시장적 사회주의의
여론을 주도한 인물이다.



많은 사람은 영국 출신 정치경제학자 겸 사회철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을,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적 자유주의를 완성한 인물로 여긴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19세기 중반 자유무역을 통해서 자유주의가 꽃을 피우던 시기에 반(反)시장적 사회주의의 여론을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자유의 물결로 산업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런 산업화를 이끈 자본주의는 기대한 만큼 경제적 성과가 없다. 빈곤은 숙명이다 등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음울한' 예측만이 난무했다. 3살 때부터 아버지의 혹독한 조기교육을 통해 성장했던 밀은 선배들의 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은 틀린 이론이라고 선언하면서 분배를 중시하는 좌측을 가리키며, 이것이 인류의 번영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성장보다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

한창 친구들을 사귄 나이에 아버지의 가혹한 채찍으로 집에서 혼자 공부에 전념했던 밀은 당시 시장의 제일의 덕목으로 여겼던 경제성장으로는 노동계급의 비극을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분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밀은 나눌 파이를 줄이지 않고는 분배하기 어렵다는 세간의 이론적 저항에 부딪힌다.

그러나 그는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부의 생산 세계는 분배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나눌 파이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도 정부가 분배를 변동하여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로 세간의 주장에 응수했다. 마치 들판에 자라는 사과나무처럼 사과를 어떻게 나누든 사과나무의 사과 열매의 수효에는 어떤 영향도 없듯이 말이다.

그러나 생산과 분배는 분리 가능하다는 밀의 주장은 기발하지만 틀렸다는 것이 건전한 경제학의 확립된 인식이다. 분배의 부담을 지는 소득계층은 물론이요, 분배 혜택을 받는 하류층 모두의 일할 의욕이 상실된다. 일을 열심히 해서 또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면 번 돈의 일부는 분배를 위해서 세금의 형태로 빼앗기기 때문에 일할 의욕과 투자 위축이 초래된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다. 분배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먹여주기 때문에 일할 의욕이 없어진다. 투자·일 의욕의 상실은 파이의 크기, 즉 부의 감소를 초래한다.



영국 런던 빅토리아 임뱅크먼트 가든에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동상

파이를 키워서 나누라고?

밀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또 하나의 믿음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는 언젠가는 더 이상 성장이 없는 정체된 경제가 도래한다는 믿음이었다. 부의 성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성장을 늘릴 필요도 없고 자본과 노동 그리고 부의 성장이 정체된다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 ‘성장정체’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해도 밀은 걱정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어느 정도 파이를 키우면 사람들은 파이의 크기보다 파이의 분배가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 밀의 생각이었다.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물질적 이득보다는 나눔과 건전한 사회 기풍 같은 정신적인 것을 중시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것이 최초로 밀이 주장했던 ‘선(先) 성장 후(後) 분배’ 논리다. 이는 사람들의 선호를 쫓아서 사회주의가 저절로 실현된다는 얘기다.

커진 파이는 나누어도 유지될 수 있다는 밀의 주장도 전혀 옳지 않다. 재분배는 생산적 활동 의욕을 갉아먹기 때문에 달성된 성장도 줄어들 수밖에 없

한때는 영국 국회의 하원의원이 되어 여성의 선거권 보장을 관철시키기도 했던 밀의 사상은 수많은 지식인을 사회주의로 전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밀은 경제적 자유를 무시하는 대신에 언론·표현·학문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말하는 정치적 자유를 중시했다. 밀의 정치관도 흥미롭다. 현명하고 도덕적인 인물이 정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는 정치를 엘리트주의로 만들었다. 전형적인 사회주의 논리다.

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그래서 파이를 키운 후에 나누자고 하는 논리도 틀렸다. 나누기 시작하면 커진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뒤쳐진 국가들이나 하는 일일 뿐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좀 더 나은 분배라는 밀의 생각도 틀렸다.

성장 없는 경제는 유지될 수도 없다. 정태적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삶의 꿈과 비전이 없고 풀이 죽어서 불안과 불신, 그리고 특히 위험한 사회적 갈등만이 지배할 뿐이기 때문이다. 성장하는 경제만이 사회가 활기차고 너그러움, 다양성에 대한 관용, 공동체 정신 등 사회 기품도 살아난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성장하는 경제만이 실업, 빈곤, 불평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경제는 경제적 자유가 뒷받침될 경우에 가능하다. 성장이 없는 정체된 경제가 도래한다는 논리도 그래서 틀렸다.

사회주의 여론을 주도

상속은 기회균등의 원리를 침해하고 상속받는 자녀에게는 불로소득이기에 고율의 세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그리고 토지 사유화도 억제해야 한다고 밀은 목소리를 높였다. 과시적 소비와 유흥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것도 제안했다. 빈민구제와 노동자의 권익,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정책들은 사회주의로 가까이 다가가는 개혁조치다. 그런데 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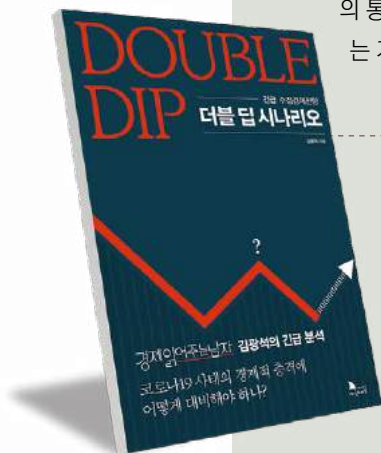
사상이 좌 편향적 이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밀이 25세 때 알게 된 23세의 어느 귀족 유부녀의 사회적 감성 때문이었다는 것이 밀의 연구자들의 전언이다. 그는 그녀와 친구 관계를 20년간 유지하다가 그 여인의 남편이 사망하자 그들은 결혼하게 되었다. 딸 하나를 낳고 결혼 후 7년 만에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더욱더 그의 사상은 좌경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때는 영국 국회의 하원의원이 되어 여성의 선거권 보장을 관철시키기도 했던 밀의 사상은 수많은 지식인을 사회주의로 전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밀은 경제적 자유를 무시하는 대신에 언론·표현·학문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말하는 정치적 자유를 중시했다. 밀의 정치관도 흥미롭다. 현명하고 도덕적인 인물이 정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는 정치를 엘리트주의로 만들었다. 전형적인 사회주의 논리다. 1890년대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하코트는 '현재 우리는 모두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하면서 밀을 찬양했던 것은 과장이 아니다. 밀의 사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는 그의 1848년 저서 『정치경제학 원리』가 입증한다. 이 책은 32판이나 발간되어 서구사회에서 반세기 동안 경제학 교육의 내용을 지배했다.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분배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이 책은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에게는 황금률이지만 자유시장만이 빈곤, 복지,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읽기에 거북스런 책이다.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더블 딥 시나리오 - 긴급 수정경제전망

01

지은이

김광석

- 저자 김광석은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원 및 한국 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이다.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경제학을 강의하면서 방송사 경제현안을 해설하고 언론에 경제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출판사 지식노마드

발간일 2020년 3월 12일

66 2020 경제 팬데믹을 불러온 블랙스완, 코로나19

2020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더블 딥(Double Dip)이 현실화되고 있다. 2019년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서 2019년 말부터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2020년 2월부터 다시 급랭하기 시작했다. 이제 변화한 경제 상황을 받아들이야 하는 때가 왔다.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 매주 경제현안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는 자칫 공포에 휩쓸리기 쉬운 위기라고 이야기한다. 이때에 올바르게 상황의 변화를 읽고 개인·기업·국가 등 각 경제 주체가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 역할로서 긴급 수정경제전망을 내놓았다.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라고 말하는 저자는 국내외의 분석을 종합하여 2020 한국 경제에 '더블 딥 시나리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세계 주요국의 중요한 정책적 대응과 한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의 재정 정책, 기준금리 등의 통화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기업과 개인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설명한다.

- 1장 더블 딥이 오는가?
- 2장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
- 3장 중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와 코로나19 사태
- 4장 코로나19 사태의 파급 영향 시나리오
- 5장 2020년 수정경제전망

부록

- 1.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 2. 주요 투자은행의 아시아 주요국 경제지표 전망

뉴 머니, 지역화폐가 온다

02

지은이

이한주 외 7명

- 경기연구원 연구원들과 지역공공경제연구소 연구원,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 교수, 소설가 등 다양한 직군 8인의 저자가 함께 지역화폐와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했다. 지역화폐의 이론과 실재를 살펴보고 적합한 발전모형을 찾기 위해 수행한 연구 성과를 담았다.

출판사 다할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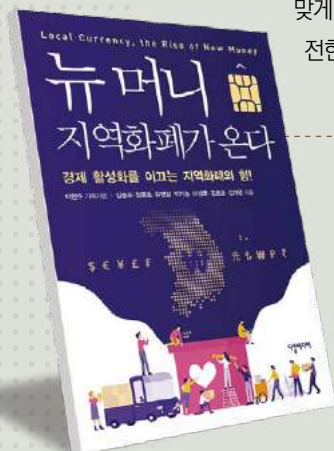
발간일 2020년 4월 30일

KPFIS's
library

66 연대와 상생을 이끌어내는 지역화폐

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대안화폐를 말한다. 지역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화폐'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최근 지역화폐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구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지역화폐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재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화폐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그 성과도 담았다.

지역화폐는 지역소외 현상과 경제적 위기 극복의 동력으로 작용해 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게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부딪힌 만큼 이 같은 경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기도지사와 경남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저자는 다가오는 지역화폐의 시대를 준비하며 지역화폐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바탕과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전한다.



- 발간사** 지속가능한 삶, 연대와 상생의 지역화폐로
- 프롤로그** 지역화폐,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의 도구가 되다
- Part 1** 지역화폐 시대가 열린다
- 더 알아보기** 지역화폐를 둘러싼 쟁점과 미래
- Part 2** 경제공동체를 살리는 지역화폐
- 더 알아보기** 혁신기술이 낳은 가상화폐_유사개념_블록체인, 암호화폐
- Part 3** 한국의 지역화폐를 생각하다
- 에필로그** 화폐를 넘어 관계로, 자치로, 미래로

Financial Calendar

5月

May



재정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경제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발표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anuary

01

재정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재정 2019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통계청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발표

March

03

재정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경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경제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August

08

경제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September

09

재정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020

□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기획재정부, 4.7.)

- 정부는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 제출 예정
- 주요 특징으로 불용률(1.9%)은 2006년(1.6%) 이후 최저치를 달성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12.0조원 적자)는 세수결손, 세수증가세 둔화와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 증가 등으로 적자 확대, 국가채무(699.0조원)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7.2조원 증가하였고 세계잉여금은 2.1조원(일반회계 619억원, 특별회계 2조609억원) 발생

□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IMF, 4.14.)

-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3%(1월 기준)에서 -3.0%로 전망(2020년 1월 전망 대비 -6.3%p 하향조정)
- 선진국의 경우, -6.1%(2020년 1월 전망 대비 -7.7%p), 신흥개도국의 경우 -1.0%(2020년 1월 전망 대비 -5.4%p)로 성장전망을 대폭 하향조정하였으며 한국은 올해 -1.2%(2020년 1월 전망 대비 -3.4%p) 성장을 전망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기획재정부, 4.30.)

- 정부는 국민의 소득·생계보장,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3.4조원의 국채 발행과 8.8조원의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2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 추진

April

04

- 재정** 2019년 결산검사 의뢰(기획재정부→감사원)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 재정**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경제**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발표
-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 경제**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October

10

- 재정** 국유재산/물품 결산지침 확정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 재정**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경제**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 재정** 2021년 예산 확정
- 경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 안전·직장 내 괴롭힘 포함 첫 단협 체결

한국재정정보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재정정보원 지부는 31일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9월 노조 설립 후 첫 단체협약이며, 지난해 7월 교섭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이다. 단체협약은 17장 74개(부칙 포함)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합가입·교섭·쟁의·교육 등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과 근로시간·임금·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또한 안전·모성보호·인권·직장 내 괴롭힘·개인정보 등에 관한 권리·의무·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일터안전·휴식권·출산육아·존중문화 등의 든든한 기본 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간부들이 연 1회 이상 노동 관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노동 존중 경영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 것과 근로자의 사회적 책임 재고 노력을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단체협약은 기존의 취업규칙 및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협약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한국재정정보원 김재훈 원장은 “지난해 12월 노사합의로 직무무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 협약체결로 노사가 다시 한번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k p f i s news

한국재정정보원,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획득

한국재정정보원이 정부의 ‘2019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평가그룹 내 A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한 공공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로, 1월부터 2월까지 약 두 달간 128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방법은 안전보건체제, 안전보건활동 계획, 안전보건활동 수준, 안전보건활동 성과 등 4개 분야, 34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학계 등 전문가가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부정책 및 대내외 환경 분석 등을 통해 안전영역 3대 분야를 △산업안전 △재난안전 △정보안전 등으로 설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안심 재정정보 관리체계 구현 △안전문화 DNA화 등 안전경영 3대 추진방향을 도출·시행함으로써 평가영역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이에 앞서 글로벌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을 획득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97점으로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등 산업·재난·정보 안전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제2회

「열린재정」을 활용한 논문 공모전

재정정보 공개포털 「열린재정」은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60여종의 재정통계와 사용자별 맞춤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모 분야

「열린재정」의 재정통계를 활용한 경제학·행정학·통계학 등
재정관련 전 분야

응모 자격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대학원생의 경우 수료자 가능)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 응모자 포함 4인까지 가능

시상 내역

시상 등급	편 수	부 상
최우수상	1편	500만원
우수상	1편	300만원
장려상	3편	100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역을 변경될 수 있음

응모 방법 및 일정

참가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0년 6월 1일(월) ~ 6월 30일(화)
- 접수방법: ①참가신청서, ②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전자 우편으로 접수
※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 참조
- 접수처: thesis@kpfis.or.kr
- 문의: 02-6908-8581

「열린재정」 자료 활용 설명회

- 일시: 2020년 7월 초(추후 안내)
- 대상: 논문 공모전 참가자
- 내용: 「열린재정」 재정정보·통계 자료 소개 및 활용방법 설명,
논문 공모전 일정 안내 및 질의응답

논문 제출마감: 2020년 10월 30일(금)

결과 발표: 2020년 11월 말

상세 내용은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 또는
열린재정 홈페이지(www.openfiscaldata.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로	운		일	상		
생	활		속		거	리		두	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애독자 QUIZ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2020. 5. 22. ~ 2020. 6. 12.

문 제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국가 회계의 종류는?

POSTCARD

4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의무지출

☆ 상품 당첨자

nex*****@gmail.com
clo*****@hanmail.net
whi*****@naver.com
woo*****@yahoo.co.kr
cho*****@daum.net
sdj*****@hanmail.net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이번호에 흥미롭게 다뤄주신 디지털 트윈 관련 내용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정말 먼 미래에 실현 될 수 있는 영화상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우리 생활 속 업무 속에서 구현되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이번호에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clo*****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